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1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재가연대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빌딩 3층(100-855)
www.buddha21.org/ bsr@buddha21.org
02-2278-3417 / 02-2278-35321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1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

- 일시 : 2009년 6월 20일(토) 14:00~18:00
- 장소 :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 후원 : 헌법파괴종교차별종식범불교대책위원회
- 주관 : 사)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심포지엄을 마련하며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한국사회가 그러하듯이 종교의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종교사회라는 한국사회의 관용적 전통이 무너지고,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는 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세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사회통합의 디딤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기주의와 대립의 상징이었을까요? 나아가 20세기와 지난 10년을 관통한 한국의 종교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한국의 종교변동을 살피고 조망하는 일은 종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미 한국의 종교는 어떠한 민간부문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비단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미래 역시 과학적인 사회문화 및 종교변동의 전망 하에서만 온전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미래 문명의 대안...’이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대신 불교의 눈으로 사회와 종교의 변동흐름을 분명하게 짚고, 그 안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밝을 관찰함과 더불어 불교계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미래사회에서 불교의 가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찰과 전망. 이 두 단어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참여불교재가연대에게도 지상 과제입니다. 교단자정, 인재양성, 종교차별, 생활수행, 국제네트워크 등 재가연대가 지난 10년 벌여온 활동은 주로 불교 내부의 성찰 쪽에 치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와 종교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불교운동의 전망을 내오려 합니다. 종교도 결국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물음에 재가운동 역시 답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성찰과 전망을 위한 중간 정도의 징검다리라 해도 좋겠습니다. 과거를 비추어보되, 미래를 위한 좌표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불교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나아가 미래사회에서 존재가치를 뚜렷이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옥고를 발표해주신 논찬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 6. 20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권(상임대표), 김성립, 김희욱, 박광서, 박운식, 백경남, 이민용, 이수덕, 전우희(이상 공동대표)

Program

여는 마당

사회 ▶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재가연대가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할 길
- 인사말 김동건 상임대표
- 심포지움 연찬자 소개

사회 ▶ 성태용 건국대 교수

● 1주제 현대 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	발표 · 강인철 한신대 교수
	토론 · 박맹수 원광대 교수
● 2주제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의 길에 들어섰나?	발표 · 백찬홍 (재)씨알 홍보위원장
	토론 · 정범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Tea Break	
● 3주제 이 시대의 불교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	발표 · 조은수 서울대 교수
	토론 ·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종합토론	

목 차

I. 심포지엄 자료

● 1주제 현대 한국의 종교화 국가권력 / 7

발표 강인철 한신대 교수 / 9

토론 박맹수 원광대 교수 / 39

● 2주제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의 길에 들어섰나? / 43

발표 백찬홍 (재)씨알 홍보위원장 / 45

토론 정범스님 조계종중앙종회 의원 / 79

● 3주제 이 시대의 불교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 / 91

발표 조은수 서울대 교수 / 93

토론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 106

II. 참고자료

● 재가운동의 정체성을 찾아서_김재영(법사/청보리회) / 113

● 참여불교재가연대 소개 / 117

• 1주제 •

현대 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

현대 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

강인철 ·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해방 후 최근까지 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의 관계사를 개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허다한 사건들과 사연들을 짧은 글에 다 담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아마도 몇 권의 단행본으로나 이런 의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방향 감각을 살리기 위해 현대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 연구를 개관하면서 향후의 연구 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상황의 특수성에 유념하면서, 정치엘리트와 종교엘리트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에 맞춰 변화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데 주력할 것이다.

1. 현대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 연구 : 회고와 과제

2000년 조지 부시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이듬해의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의 이라크전쟁 등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전반에서 종교와 정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드러난 “종교의 압도적인(그리고 때때로 위협적인) 존재”로 인해 종교를 바라보는 여론 자체가 변화되었고, “새로운 세기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종교 요인의 적합성”을 부인하는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¹⁾ 여론의 변화는 학계의 분발을 자극함과 동시에, 비교적 풍족한 연구기금 등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인류가 겪는 참극들이 ‘종교와 정치’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물론 어떤 학자도 9·11사건을 예견하지 못했지만, 서구 학계는 9·11사건 이전 약 20여 년간 전개된 일련의 변화들을 통해 새로운 사태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축적해왔다. 이 변화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냉전체제와 사회주의블록의 붕괴와 함께, 옛 소련의 변경지역(발칸반도, 코카서스지방, 중앙아시아)과 동유럽에서 ‘종족-종교 분쟁’(ethno-religious conflicts)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둘째, 1979년의 이란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전투적인 이슬람근본주의운동이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서북아프리카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상당수 국가에서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거나 주요한 정치세력 중 하나로 등장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신(新)기독교우파’(New Christian Right 혹은 Christian New Right)라고 불리는 보수적 개신교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여, 공화당 내 최대의 정치블록으로 등장했다. 이런 큰 흐름들에 편승하여, ‘종교-정치 연구의 르네상스’가 1980년대부터 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서구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종교)-국가 관계’연구를 포함하여, ‘종교와 정치’, ‘종교와 폭력적 분쟁’의 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 떠올랐다.

같은 주제에 대한 외국 학계의 성과에는 못 비치지만, 한국에서도 지난 20~30년 사이에 종교와 국가, 종교와 정치 문제를 탐구한 논문이나 저서들이 꽤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 내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1980년대 들어서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

1) Grace Davie, “The Evolution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Themes and Variations,”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61.

고, 그만큼 연구의 시기적 지체가 심했다. 둘째,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의 편중이 심하며, 해방 후에 한정할 경우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기, 1987년 이후(민주화 시기)에 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 셋째, 연구대상에서도 극심한 편중이 나타나며, 개신교와 천주교를 제외한 종교들에 대한 연구, 주요 종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넷째, 시민종교(civil religion)나 정치종교(political religion)의 형성 및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거의 없다. 다섯째, 마찬가지로, 신종교-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천착한 연구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섯째, 2000년대에 공론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제외하면, 시대에 따라 그 항목이나 중요도가 달라지는, 종교정치(religious politics)와 관련된 쟁점별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 일곱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교-국가 관계를 ‘저항’과 ‘협력’이라는 단순화된 이분법적 도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들은 종교-국가 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만, (좀 더 세분된 도식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저항과 협력의 중첩’에 의해 형성되는 종교-국가 관계의 ‘복합성’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가 전반적으로 과소하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앞으로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에 관한 연구자들은 다음의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

(1)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의 편중으로 인한 공백과 불균형 개선 지난 60여 년을 놓고 볼 때, 기존 연구들은 1960~1980년대, 즉 박정희 정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전두환 정부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대개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개신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야말로 서구 학계의 종교-정치 연구가 한국 학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과 자극을 제공한 연구주제였다. 그러나 신생 독립국가의 종교-정치-국가 관계의 ‘원형적 틀 형성’의 시기라는 점에서, 미군정 및 이승만 시대(1945~1960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주화 이후’, 즉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1987년 이후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고 흥미롭지만 거의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다. 예컨대 ‘민주화 이후’ 종전의 민주화 주도세력(개신교와 천주교의 진보 세력들)의 정치적 보수화, 이들이 속한 교단들 내부에서 진행된 보수 세력의 영향력 확대와 ‘보수적 사회참여’ 내지

‘보수적 방향의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의 활성화, 과거 민주화운동에 소극적이거나 군사정부들에 협력적이었던 불교의 본격적인 사회참여 개시, 특히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1994년 종단개혁 이후의 변화,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영역 개입과 통제가 감소한 대신 시민사회(특히 시민운동단체와 언론)의 종교영역 개입과 견제 증가하는 추세 등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종교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① 종교자유의 점진적 증진 ② 종교차별의 점진적 축소 ③ 새로운 종교통제 방식의 등장, 특히 정부보조금과 조세를 통한 종교통제의 증가 ④ 한국 종교의 해외진출(해외선교·포교) 활성화로 인한 국가와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대상인 ‘종교의 편중’으로 인한 공백과 불균형 개선 그 동안 해방 후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연구는 개신교와 천주교에 집중되었고, 해방 당시나 현재나 한국의 최대 종교인 불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해방 당시 신자 규모와 정치·사회적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6대(大) 종교’에 포함되었던 유교·천도교대 종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불교’와 정치-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주요 ‘신종교들’, 불교·개신교·천주교 이외의 ‘중규모급 주요 종교들’(유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계속된 ‘무속(무교) 및 민간신앙’에 대한 통제와 배제 시도들, 그리고 1980년대 이후(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관광산업 진흥이나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복원 혹은 재발견 시도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비교역사적(comparative-historical) 접근을 통한, 종교-정치-국가 관계의 ‘한국적 특수성’ 규명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 학계에 대한 한국 학계의 가장 큰 기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서구 사회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성은 ① 종속적 권위주의 국가(dependant authoritarian state) ② 세계종교질서(world religious order)의 주변부(periphery) 및 그리스도교의 피(被)선교지라는 구조적 위치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두 가지 특성에서 비롯되는 ‘규제력 격차’(regulatory gap)²⁾와 ‘종속성의 역설’(paradox of

dependancy)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현상이 종교 측의 정치-국가에 대한 태도 형성이나 국가 측의 종교에 대한 대응방식 등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규제력 격차’와 ‘종속성의 역설’ 현상이야말로 해방 후 한국에서 종교-정치-국가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결정지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었다고 가정한다.³⁾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국가의 특징이었던 ‘종속적 권위주의’는 한국의 종교들에 대해 양면적으로 작용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종교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 강력한 규제력을 행사하며, 때때로(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가정의례준칙 제정 등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신이 시민들에 대해 ‘윤리적 교사’를 자임하면서 종교와 경쟁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모든 종교조직에 대해 우월적 통제자의 지위에 있지만, ‘종속적’ 측면에서는(국가의 종속대상인 나라의 종교조직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의 종교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력이 제한되는 것이다. 그 결과 서구사회들에서는 주로 세속적 조직들과 종교조직들 사이에 국가 규제력의 격차가 생겨나지만,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교 계통의 종교조직들과 토착적인 종교조직들 사이에서도 규제력 격차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종교와 비종교 영역 사이의 규제력 격차는 현저히 적은 반면에, 서구 그리스도교와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들과 그렇지 못한 토착적 종교들 사이의 규제력 격차는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편 ‘세계종교질서의 주변부 및 그리스도교의 피선교지라는 구조적 위치’는 결국 한국의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선교 ‘모교회’(母教會, mother churches)인 서구 교회들에 재정적인·조직적으로 종속됨을 뜻하며, 이런 종속성으로부터 이중적인 의미의 ‘종속성의 역설’이 발생한다. 종속성의 역설은 한편으로 “종교적 종속성이 정치

2) 로빈스에 의하면, 서구사회들의 경우 국가에 의해 점점 규제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교 부문은 국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면제된 ‘특권적 지대’ (privileged enclaves)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세속적 조직들과 종교조직들 사이에 일종의 ‘규제력 격차’ 현상이 발생한다. Thomas Robbins, “New Religious Movements on the Frontier of Church and State,” Thomas Robbins and William C. Shepherd and James McBride eds., *Cults, Culture, and the Law*, Chico: Scholar Press, 1985, pp. 8-11; Thomas Robbins, *Cults, Converts and Charisma: The Sociology of New Religious Movements, Current Sociology*, vol.36, no.1, 1988, pp. 164-168.

3) 보다 상세한 논의는,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개정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을 볼 것.

적 진보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즉 종교적 종속성은 서구 교회에서 발생하는 신학적·정치적인 ‘진보적 선회’에 대해 국내 교회들이 매우 취약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종속성이 국가 규제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 종교의 특수성이 종교-정치-국가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탐구 이것은 앞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비교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전반적인 종교변동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근대성과 종교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한국의 특징들은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식민지화로 인한 지배종교(국가종교인 유교)의 급격한 몰락과 그에 따른 종교지형의 급진적 다원화(radical pluralization) ②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 팽창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교의 전래(傳來) 그리고 국제적 지원을 등에 업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급속한 성장 ③ 미국의 후견에 의한 식민지 해방 그리고 미군정 하에서 미국식 정교(政敎) 관계의 이식(移植) ④ 근대성과 종교들의 친화성(affinity), 근대화에 대한 주요 종교들의 적응 및 기여 ⑤ 새로운 지배적 종교들의 등장 및 3대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심의 종교지형 형성.⁴⁾ 아울러, 해방 후 다음과 같은 한국의 종교변동들이 국제적인 주목과 지명도를 얻었다. 한국 그리스도교(개신교, 천주교)의 민주화운동,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그 결과 보수적 개신교는 한국 보수 우익의 양대 세력 중 하나로 성장,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그리스도교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였던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급속한 양적 성장, 다수의 세계적 초대형 교회들(mega-churches)이 등장한 데 힘입은 개신교 교회의 ‘초대형화 현상’,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종교인(無宗教人) 비율 등이 그것이다. 이런 ‘독특하게 한국적인’ 현상들이 지닌 정치적 함의와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종교-정치-국가의 관계의 ‘한국 모델’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정치엘리트와 종교엘리트 간 ‘전략적 상호작용’, 그리고 종교의 ‘제도적 이

4) 강인철,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43-59쪽 참조.

익’에 대한 분석 우리는 국가(및 정치엘리트)와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적 행위자들’로 간주해야 하며, 이런 전제 위에서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국가와 종교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s)’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치’는 다른 영역에 비해 특별히 전략적인 행위가 지배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선, 정치권력의 획득 및 공고화를 핵심적 이해관계로 삼는 정치엘리트 내지 지배세력은 정치권력의 정당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규제력의 확대, 선거에서의 승리, 이데올로기적 통합, 정치목표로의 대중적 동원 등 다양한 이유로 종교 측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것이다.

한편, 종교지도자들에게는 교세의 증가 혹은 감소, 종교조직 및 지도자들의 정치·작사·사회·문화적 영향력, 다양한 형태의 특권이나 자원의 제공 혹은 박탈 등 ‘종교의 제도적 이익(institutional interest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교의 제도적 이익은 특정 종교의 정치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며, 정치-국가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태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종교의 ‘교리’나 ‘전통’보다는, 종교지도자들이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제도적 이익’이 종종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전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교적(신학적) 보수주의는 항상 ‘탈정치적인’ 태도나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니며, (보수적 개신교인들의 비타협적인 신사참배 거부운동에서 보듯이) 때로는 종교적 보수주의가 국가와의 격렬한 충돌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그리스도교의 역사로 볼 때, 신학적 지향과 정치적 지향의 관계는 ‘정합(整合)’과 ‘수렴(일관성)’보다는 ‘부정합’과 ‘탈구(脫臼)’로 특징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종교의 제도적 이익을 증진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다양한 쟁점들, 그리고 그것의 시대적 변화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6) ‘국가-종교 관계의 복잡성(complexity)과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강조

교단의 제도적 이익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국가-종교 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국가 관계의 ‘다양성’에 주목했던 기존 연구들은 일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종교-국가 관계의 ‘복합성’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저항 대(對)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종교-국가 관계의 복잡성

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① 해방 이후 국가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저항’의 입장 그리고 비교적 일관된 ‘협력’ 입장을 취한 종교집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② 비교적 일관되게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태도를 유지한 양극단의 공간들의 상당 부분마저 때때로 포함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공존하고 뒤섞임으로써 어떤 태도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든, 매우 넓고 두터운 ‘회색지대(灰色地帶)’가 존재했다.

(7) ‘쟁점별 연구’(thematic study)의 활성화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된 제도적 이익이 중시된다면, 시대마다 교회-정치-국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쟁점별 연구’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쟁점별 연구는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자주 행해졌지만, 사실 많은 종교-정치적 쟁점들은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무인가) 신학교 등 전문종교인 양성기관의 법적 지위,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격 허가 혹은 거부, 불교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나 충렬사(忠烈祠) 참배 등과 같은 국가의례 참여, 종교적 상징이나 인물이 포함된 주화(鑄貨)나 지폐(紙幣)의 디자인, 종교문화재의 선정 및 개보수 비용 제공, 종교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종교 관련 조세정책, 수혈(輸血)과 치료, 국가기관에 대한 선교포교 참여 권한(특히 군대, 교도소와 유치장, 국공립 병원에서의 산포교), 종교언론의 설립과 인가, 종교 관련 국경일 혹은 공휴일 체계, 토요일 혹은 일요일 휴무(休務) 문제, 가족계획과 의료정책을 포함한 생명윤리 문제, 개발과 관련된 종교의 환경 분쟁, 도시에서의 장례 및 납골 시설 설치, 농지 및 산림정책과 종교, 국장이나 국민장 같은 정부 주도 장례식에 참여하는 종교의 범위, 특정 종교의 정기적 의례(예컨대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대통령의 참석 문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나 오찬모임에 초청 범위, 특정 국가기관(통일주체국민회의)에 참여하는 종교의 범위 등 수많은 쟁점들이 종교-정치-국가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크게 부족했던 이런 세밀한 연구를 통해 종교-정치-국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훨씬 더 정확해질 것이다.

(8) 시대간의 인과적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사적(通史的) 연구 쟁점별 연구와 함께, 종교-정치-국가 관계의 ‘중장기적인’ 변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또

한 강조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해방 후 현재까지의 시기 전체를 개관하는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대간의 인과적 영향 관계’, 즉 한 시대가 후속되는 다른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예컨대 미군정 시기의 미국식 종교-정치-국가 관계가 신생(新生) 대한민국 정부의 그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박정희 시대의 치열했던 종교-국가 갈등이 뒤이어 국가권력을 장악한 신군부(新軍部) 세력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고 그 결과 전두환 정부의 종교정책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은 해방 후 전체 역사에 대한 통사적 접근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9) ‘시민종교’와 ‘정치종교’ 접근의 활용. 그 동안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 연구들에서 외국 학계의 뛰어난 관련 연구 성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현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민종교(civil religion)와 정치종교(political religion)의 영역이다. 이 가운데 시민종교는 국가와 민족의 성화(聖化)를 통해 민족국가의 문화적 통합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정치종교는 파시즘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대중의 자발적인 복종과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정치의 성화’(sacralization of politics)와 ‘정치의 미학화 혹은 심미화’(aestheticization of politics)라는 두 기제에 의해 형성된다.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중 이 측면들에 주목하고 천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가(國歌)·국기(國旗)·국경일(國慶日)·공휴일·기념일·국가연호(國家年號)의 제정 및 변화, 국장(國葬)과 주요 국가행사들에 적용되는 국가의례 체계의 형성 및 정비, 이러한 의례로의 주기적인 동원과 그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위대함을 체감하게 만드는 ‘집합적 열광’의 분출,⁵⁾ 스포츠행사나 국군의 날 퍼레이드 혹은 영웅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대규모 재난(災難)에 대한 대응 등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국가적 이벤트들, 국립묘지와 전적지 등을 비롯한 국가적 성소들(聖所)의 창출 그리고 그 성소들에 대한 순례활동(성지순례), 민족적 신화 및 영웅들의 창출과 숭배보호,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과거 역사에 대한 편찬재해석 작업, ‘국민(國民) 형성’을 위한 ‘국민윤리’ 교육과 정치사회화 등을

5) ‘집합적 열광’ 개념에 대해서는,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역, 민영사, 1992; 김종엽, 『연대와 열광: 에밀 뒤르케임의 현대성 비판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등을 볼 것.

분석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신종교-국가’, ‘민간신앙-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시민종교와 정치종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서구 학계의 성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 영역은 ‘신종교와 국가’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는 건국 초기의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과 미신타파운동,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에 의한 무속민간신앙 추방, 문선명과 박태선 재판, 일본계 종교인 창가학회와 천리교의 포교를 둘러싼 갈등, 신종교 밀집 지역(대표적으로 삼각산과 계룡산)의 정비 내지 해체, 신종교에 의한 강제적 개종 혹은 세뇌 논란, 신종교와 관련된 가출납차집단자살, 독특한 교리나 권위주의적 카리스마에 근거한 교주(敎主)의 성적 학대나 간통 문제, 종교교리와 연관된 병역거부나 집총(執銃)거부 문제, 안식일 준수 문제, 긴급한 환자들에 대한 수혈(輸血) 거부나 안수기도 등 ‘종교적 치료’와 관련된 문제, 종교와 경제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과세(課稅) 문제, 헌금(獻金) 유도와 사기(詐欺)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긴장 등 신종교들과 관련된 종교-국가 갈등의 무수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쟁점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11)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우리가 입체성과 역동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종교-정치-국가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나아가 범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연구주제와 대상’ 면에서, 우리는 시민종교 혹은 정치종교의 형성과 변화, 국가의 종교정책, 정치엘리트 내지 지배세력의 종교적 구성과 성향, 주요 종교들(특히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 주요 종교들과 국가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쟁점들을 다차원적으로 통합하려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학문분야’ 면에서도, 법학, 정치학, 사회학, 종교학, 역사학, 신학(교회사) 등 다양한 학문분야 학자들이 이미 종교-정치-국가 관계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분야들에서 이뤄진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합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과 종교의 대응전략

1)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

베네주엘라 태생의 종교사회학자인 오토 마두로(Otto Maduro)는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hegemonic strategy)’이라는 차원에서 종교와 정치, 국가의 관계를 논한 바 있다.⁶⁾ 그에 따르면, 지배의 동학은 지배층(지배계급 혹은 지배블록)의 헤게모니 획득, 즉 “그 사회의 모든 개인과 집단들에 의한 지배의 일반적 승인”을 지향한다.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은, 한편으로 양적·질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부문들과의 ‘동맹’을 지향하며, 다른 한편으로 기존 지배질서에 위협적인 개인, 집단, 운동들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마두로에 따르면, 종교부문(religious sector)이 그 사회의 거대 집단들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헤게모니를 위한 지배층의 노력은 종교부문을 향하게 될 것이다. 첫째, 지배층의 노력은 지배를 정당화하고 성화(聖化)하며, 이 지배가 초자연적·초사회적 힘의 뜻을 반영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실천 및 담론의 생산을 종교부문으로부터 획득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 지배층은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개인, 집단, 운동에 대해 적격성과 정당성을 박탈하고, 이들을 탈성화(脫聖化)하며, 이것들이 초자연적·초사회적 힘의 뜻이 아님을 명백히 제시하는 실천 및 담론의 생산을 종교부문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두 번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지배층은 최소한 종교부문이 지배층의 헤게모니에 대항한 종속계급의 투쟁에 우호적인 실천이나 담론을 생산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결국 종교부문을 향한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은, ‘지배의 성화’와 ‘저항의 탈성화’를 이 부문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한 지배층의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마두로는 이를 (1) 경제 전략, (2) 가족 전략, (3) 법적·정치적 전략, (4) 교육과 문화 전략, (5) 억압 전략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이런 전략들이 성공을 거둔다면, 성직계층과 지배층 사이에 상호침투, 동일시, 상호적인 의무감과 존중이 발전되고, 그 결과 종교적 실천과 담론의 생산은 지배층의

6) Otto Maduro,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2; 강인철 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 한국신학연구소, 1988, 207-211쪽.

헤게모니에 더욱 우호적이고 지배에 대항하는 투쟁에는 더욱 비우호적인 것으로 구조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두로는 각각의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1) **경제 전략** 지배층은 특권과 부를 제공함으로써 최고위 성직계층과의 연계를 창출하려 노력한다. 이는 기존 경제체제 안으로 고위 성직계층을 편입시키고, 이 성직계층 가운데서 지배층과 기존 체제에 빚지고 있다는 (명시적이라기보다는 암묵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제약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가족 전략** 지배층은 교회에서의 결혼식, 세례상의 대부(代父) 관계, 인척 중의 한 사람이 종교적 직업을 갖는 것 등을 통해, 최고위 성직계층과의 (유사)인척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들은 성직계층을 지배층의 생활양식 안으로 편입시키고, 성직자들 가운데서 지배층에 빚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배층과 동질적인 정체성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한다.

(3) **법적·정치적 전략** 지배층은 헤게모니 전략에 우호적인 종교적 경향들의 발전을 촉진할 법적 기제들을 창출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근접한 성직계층에 특권을 부여하며, 그들과의 유대를 창출하고, 지배에 대립하는 종교운동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정교(政敎) 협약, 후원 협정, 그 밖에 교회-국가 간 상호승인의 형태들은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반대급부로 종교 측에 대해 법적인 특권을 승인하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4) **교육과 문화 전략** 지배층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견해와 관점들의 전파에 우호적인 문화과정 및 교육제도를 창출 혹은 강화하려 한다. 그들은 성직계층 자체가 지배층의 사고틀 속에서 구조되도록, 성직계층을 이런 문화과정과 교육제도의 관리직으로 편입시키려 노력한다. 그에 따라 이런 문화과정과 교육제도들은 동일한 사고틀이 전달되고 성화되는 채널로 기능한다.

(5) **억압 전략** 지배층은 때때로 기존 질서의 유지에 우호적인 종교들을 받아들이도록 외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 또한 기존 질서에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모든 종교

적(혹은 반종교적) 활동을, 이를테면 벌금형, 투옥, 유배 등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마두로의 헤게모니 전략을 소개한 오경환은 한국의 경우 지배층이 법적·정치적 전략과 교육·문화 전략, 억압 전략 등 세 가지 전략을 주로 구사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오경환은 법적·정치적 전략의 사례로서, 문화공보부의 종무국 및 (1982년에 이것이 확대 개편된) 종무실 등을 통한 대(對)종교 활동, 현실 참여적 종교인들의 순화, 비판적인 종교행사의 차단 혹은 조정, 종교계 안에 비판적 사상의 확산 저지, 종교인들의 국제적 연계활동 차단, 비판적 종교지도자의 해외여행 규제 조치 등 198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던 정부의 다양한 활동들, 전두환 정권이 불교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했던 노력들—사회 안정을 위한 조계종의 성명서 발표 유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태고종의 민족 화합 결의문 유도, 금강산댐 건설을 규탄하는 불교종단협의회 성명서 발표 유도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그는 박정희의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 교육·문화 전략의 사례로서, 종교방송국의 활동 억제, 종교 출판물의 압수, 종교서적의 판매 금지를 비롯하여, 일간신문이나 TV 방송에서 비판적 종교인의 발언과 의견을 억제하는 동시에 협조적 종교지도자의 견해를 부각시킨 것 등을 들었다.⁷⁾

반면에 오경환은 경제 전략이나 가족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례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략이 활용된 개별적인 사례들도 다수일 것이다. 경제 전략의 사례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이다. 개별 사례를 적시하기 어려운 가족 전략을 제외하고, 다른 헤게모니 전략들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려본 것이 <표 1>이다.

<표 1> 한국에서 구사된 헤게모니 전략의 사례들

하위 전략들	주요 사례들
경제 전략	• 적산(敵産)에 대한 사용권 허용과 헐값 불하(미군정, 1공) • 종교법인과 전문 종교인에 대해 각종 면세 혜택 제공(미군정 이후) • 외국의 선교자금(이른바 ‘선교弗’)에 대한 환율 혜택 제공(1공) • 농지개혁에서 종교에 광범위한 예외 인정(1공) • 주요 사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 허용 및 점진적 확대(3공 이후) •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와 점진적 확대(3공 이후)

7)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광사, 1990, 335-338쪽 참조.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들의 종교계 위탁경영과 재정보조(5공 이후),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보조(주로 김영삼 정부 이후) • 종교계 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한 재정보조(주로 5공 이후), 전시시설 건립 지원(김영삼 정부 이후)
법적·정치적 전략	• 개신교에 형목제도 허용(미군정, 1공),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파교회제도의 도입(3공) • 종교적 성격의 공휴일 도입(미군정, 1공)과 불교로의 확대(4공) • 현충일의 의례에 종교적 성격 도입(1공) • 국장·국민장에 종교의식 도입, 특히 ‘3중 종교의례’ 도입(4공 이후) • 군중제도의 도입과 운영(1공 이후), 군중제도에 불교의 참여 허용(3공),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향목제도 도입(3공 이후) • 경목제도의 도입(3공) •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의 도입(3공) • 불교 및 유교 관련법의 제정(3공, 5공) 및 개정(3공 이후) • 전군신자화운동(3공, 4공) • 성직자들을 민방위대 정신교육 교관으로 임명(4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의 운영(5공 이후) • 주요 종교지도자들의 청와대 초청행사, 정부 고위층의 종단 대표자 방문(주로 5공 이후)
교육·문화 전략	• 초대형 대중전도집회의 허용과 지원(1공, 4공, 5공 그리고 그 이후) • 기독교방송(CBS)의 광고 및 보도기능 허용(1공, 6공) • 1980년대 개신교와 천주교의 초대형 기념행사 허용 및 지원(5공, 6공) • 산업선교회, WCC에 대한 용공 공격(4공, 5공) • 종교방송과 종교계 종합일간지의 인가(6공, 김영삼 정부)
억압 전략	• 좌경 및 중도와 종교단체의 해체(미군정, 1공) • 천주교계 경향신문 정간 및 폐간, 천주교계 매일신문사 습격, 노기남 대주교 교체 시도(1공) • 저항적 종교인들에 대한 연금, 체포, 투옥(3공~6공) • 저항적 외국인 선교사의 추방(4공) • 기독교방송(CBS)의 광고 및 보도기능 금지(5공)

〈표 1〉에 나타나듯이, 역대 정부들은 경제 전략, 법적·정치적 전략, 교육과 문화 전략, 억압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에 특혜적인 경제 전략, 법적·정치적 전략, 교육·문화 전략을 구사했다면, 박정희 정권은 종전에 그리스도교만이 누리던 특혜들의 대부분을 한국 최대 종교인 불교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군종제도 참여, 교도소 포교를 허용한 것, 그리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승인한 것이었다. 나아가 박정권은 주요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허용함으로써 불교계에 엄청난 경제적 특혜를 제공했다. 그렇다고 박정권 아래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전의 특혜들이 철회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종전의 특혜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조찬기도회와 국가조찬기도회의 도입, 경목(警牧, 경찰 목사)제도의 도입, 전군신자화(全軍信者化)운동, 여의도광장에서 열리곤 했던 초대형 대중전도집회의 허용과 지원 등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박정권이 그리스도교에 새롭게 베푼 특혜적인 조치들이었다.

억압 전략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의해 주로 활용되었지만,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민주화 이행기로 접어들어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이승만 정부 시기(특히 1950년대 후반)의 억압 전략은 대부분 천주교를 겨냥했던 것도 특징이었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개신교에 집중되었던 경제 전략은 군사 정권들 아래서도 부분적으로 구사되었다. 그러나 경제 전략이 본격적으로 개화(開花)한 것은 민주화 이행 이후부터의 일이었다. 말하자면, 민주화 이행 이후 ‘억압 전략’의 자리를 ‘경제 전략’을 빠르게 대체해 나갔던 셈이다. 군사 정권들은 억압과 회유의 성격을 띤 교육·문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민주화 이후의 교육·문화 전략은 종교방송과 종교계 종합일간지의 인가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회유’의 성격이 훨씬 강해진 특징을 보여주었다.

2)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종교 측의 전략

한편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에 대응하여, 종교 측이 정치와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전략은 (1) 최고 통치자에의 접근 전략 (2) 정당 전략 (3)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 전략 (4) 선거 전략 (5) 사회운동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들의 개요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정치·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교 측의 전략들

전략	주요 내용
① 최고 통치자에 의 접근 전략	국가기구 및 정치사회 전반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와의 특별한 관계 혹은 적어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
② 정 당 전략	종교지도자들이 정당을 직접 조직하여 상시적으로 정치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
③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 전략	기성 정당 내의 신자 정치인들을 활용한 정치 행위, 즉 기존 정치사회 내 종교블록이나 정치인 개인들을 매개로 교단에 유리한 정책을 관철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나 제안 활동.
④ 선거 전략	종교나 교단 입장에 부합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거나 공정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들.
⑤ 사회운동 전략	주로 사회운동의 방식으로 정치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쟁점과 관련된 일시적인 정치적 활동을 조직하는 것.

종교지도자들은 위에 지적한 다섯 가지 전략 중 여러 가지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고, 실제 현실도 그러했다. 한국처럼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위주의적 통치가 장기간 계속된 사회에서는, ‘최고 통치자에의 접근 전략’이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김영삼·이명박 대통령은 소속 교회를 비롯하여 개신교지도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것은 해당 시기에 국가 및 정치사회에 대한 개신교의 영향력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장면 총리와 천주교, 노태우 대통령과 불교 사이에 형성되었다. 대통령을 초청하여 매년 개최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1966년부터 시작된 것, 천도교가 1950년대(공진향 교령)와 1960년대(최덕신 교령)에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교단의 최고지도자로 영입했던 일, 유도회(儒道會)가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을 총재로 추대했던 일, 대처 측과의 갈등과정에서 비구 측이 정부대 앞에서 벌인 시위나 탄원 행동 등도 비슷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었을 것이

다. 1963년 10월 전북 정읍 황토현에서 있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에 참여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치사를 통해 자신의 부친이 동학교도로서 동학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천도교 교단과 국가의 관계가 훨씬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교단의 역점 사업들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⁸⁾

‘정당 전략’은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의 짧은 시기(1945~1949년)에 나타났으며, 반세기 이상의 공백기를 거쳐 민주화 이행 후인 2003년 이후에 재등장했다. 해방 직후의 종교정당 움직임은 북한지역 개신교(기독교사회민주당, 기독교자유당), 그리고 남한의 천도교(천도교청우당, 천도교보국당)에 의해 시도되었다. 2003년 3월 통일교에 의해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이 창당되었지만, 이 정당은 2004년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6년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4년 3월에 개신교 주류 교단 출신 인사들이 ‘한국기독교당’을 창당하여 17대 총선거에 참여했지만, 이 정당은 저조한 득표율로 인해 해산 당했다. 2008년의 18대 총선거를 앞두고 기독교민주복지당, 사랑실천당, 기독교사랑실천당 등이 차례로 등장했고 이 가운데 기독교사랑실천당이 선거에 참여했지만, 정당 해산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득표율만을 기록했다. 역시 18대 총선에 참여했던 통일교의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은 저조한 득표율만을 기록하며 해산 당했다.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 전략’은 정당 전략보다 훨씬 선호된 전략이었고, 일부 거대 종교들에게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전략은 ‘높은 사회적 가시성(可視性)’으로 특징지어지고 다종교 상황에서 타종교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은 정당 전략과는 달리 보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나 정당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채널만 확보된다면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더욱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특히 개신교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이런 전략을 가장 능숙하게 구사했고, 따라서 독자적인 정당 결성의 필요성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해방 직후의 기독교정당 운동이 정부와 개신교 교회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던 북한지역에서만 나타났고, 남한지역에서는 전무했던 것도 이런 연유

8) 당시 박 의장은 “70년 전 제폭구민 착양척왜의 기치 아래 필기한 동학혁명군의 정신과 내 자신 2년 전 5·16혁명을 일으킨 혁명정신과 이념은 똑같다”면서, “내 자신 동학군의 아들로서, 선친께서 동학혁명 당시 앞장서 싸우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요행히 살아 남았기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편,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6, 475쪽.

에서였을 것이다. 개신교 신자 국회의원들의 상설 모임인 ‘국회조찬기도회’는 1965년에 결성되었다. 이보다 늦었지만, 개신교와 함께 3대 종교를 형성하는 불교와 천주교도 1980년대에 의회 내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1981년에는 불교 신자인 국회의원 단체인 ‘정각회’가, ‘가톨릭신도의원회’는 1988년에 각각 결성되었다. 1996년에는 청와대 내의 불교 신자 단체인 ‘청불회’가, 2006년에는 원불교 신자인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 모임인 ‘원정회’가 탄생했다.

‘선거 전략’은 1940~1950년대에, 그리고 민주화 이행 이후인 1990년대에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1950년대에는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이 선거에 동원되었지만,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의 선거 참여가 활발했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선거 제도가 직선제로 바뀌고,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1990년대에는 선거정치가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3대 종교의 ‘정치적 효용’도 덩달아 커져, 적어도 선거 시즌에는 ‘국가권력과 종교의 힘의 역전’이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1990년대에 선거 전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개신교와 불교였다. 특히 보수적 개신교 세력의 경우 특히 1992년과 2007년에 ‘장로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불교 역시 정당과 후보의 ‘불교 공약’을 이끌어내면서 교단의 제도적 이익 증진에 선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운동 전략’은 1970년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의 진보적인 그룹들에 의해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다. 이미 제도정치권(정치사회) 내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종교 세력들에게는 ‘사회운동 전략’의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1980년대에는 불교와 원불교의 진보적인 그룹들이, 비슷한 시기에 개신교 보수 그룹 중 일부(이른바 ‘복음주의 그룹’)가 비판적·저항적 사회운동의 흐름에 뛰어들었다. 개신교 진보 그룹의 일부는 1980년대 말부터 ‘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시민운동’을 주도해나갔다. 민주화 이행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 보수 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청연합회(한기총)가 등장한 이후, 사회운동 전략에 소극적이던 보수적 개신교 그룹이 태도를 바꾸었다. 이보다는 약하지만 천주교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⁹⁾ 그 결과 종교의 사회

9) 이전에도 시국성명서 발표나 기도회 등의 형식을 빈, 위기에 처한 보수 정권을 보호하려는 ‘친위대적’ 시위나 집회가 간헐적으로 열렸지만, 이것을 지속성을 지닌 사회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수적 종교인들의 사회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운동 전략은 ‘친위대적 사회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흐름과 종전의 ‘저항적 사회운동’으로 분화되었다. 개신교의 경우, 김대중 정권 이후 (이전의 정권들과 협력적이었던) 보수적 분파들이 정부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에 나섰으며,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다시금 ‘친위대적 사회운동’으로 돌아섰다.

3. 헤게모니 전략을 넘어서: 권위주의와 다종교 상황

앞 절에서 보았듯이, 오토 마두로가 제시한 헤게모니 전략들은 우리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라틴아메리카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우리 상황에 대한 이론적 적합성에는 뚜렷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상황은 천주교의 국교 내지 준(準)국교적 지위가 오래 지속되었고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이 종교에 속하는 ‘독점적이고 동질적인 종교지형’을 이루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쟁적이고 이질적인 종교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수세기 동안 천주교회의 문화적 지배가 계속되었으므로, 그 어떤 권위주의적 정부라 할지라도 천주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어려웠고,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확고한 힘의 우위를 무기 삼아 국가가 교회 전반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거나 개입하는 일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또 천주교가 잘 정비된 관료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종교와 종교, 종교와 비(非)종교의 경계들(boundaries)이 비교적 명료하게 식별될 수 있었다.

반면에 조선왕조 사회에는 (서구에서 발전된) ‘종교’(religion)라는 관념 자체가 낯선 것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와 종교(유교와 도교, 무속, 민간신앙 등)의 경계,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한 채 서로 습합되어 있었다. 예외적으로 불교가 명확한 조직체계와 조직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성직계층에 그칠 뿐 평신도로 가면 종교-종교, 종교-비종교의 경계는 여전히 흐릿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종교, 종교-비종교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는 세력은 ‘강력한 국가’(strong state) 그리고 역시 강력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가진 ‘종교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붕괴 이후 종교지형 자체가 요동치면서 그 어떤

종교도 ‘지배종교’(dominant religion)의 지위를 주장하지 못한 채 각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종교, 종교-비종교의 경계를 정의할 힘은 ‘강력한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라틴아메리카나 한국 모두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지속되었지만, 항상 천주교회와의 동맹을 추구했던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적 정부들과는 달리, 한국의 강력한 세속적 정부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종교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말해, 동질적이고 독점적인 종교지형을 지닌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강력한 정부들은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종교 책략으로부터 가장 세련된 분할통치술에 이르기까지 ‘종교정책의 선택범위’가 매우 넓게 펼쳐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부들은 보다 새롭고 좀 더 복잡한, 어쩌면 더욱 현란한 종교정책들을 구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독립 이후 미군에 의한 3년간의 군정을 거쳐 탄생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政教分離)를 헌법에 명시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과 비(非)종교성, 국가의 종교 개입과 종교적 차별 금지 등을 뜻하는 정교분리 그리고 시민 개개인과 종교단체들의 종교 자유 보장이라는 새로운 법적 규범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종교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는 기왕에 존재하던 ‘종교적 다원성의 제도화’, 그리고 나아가 ‘종교적 다원화의 촉진’이라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도입은 종교영역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개입을 훨씬 더 예민하고 논쟁적인 문젯거리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높인다. 시민사회를 통째로 식민화(植民化)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는 종교 전반에 대한 국가권력의 확고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종교 측의 반응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것이다. 국가의 권위주의적 종교통제는 종교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혹은 공포에 찬 복종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반면에 통제의 틈새를 활용하여 종교적 저항운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국가와 종교들의 관계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종교 사이의 관계는 긴장과 경계심, 그리고 서로간의 의구심으로 가득 찬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독점적 종교상황에 대비되는 ‘다원적 종교상황’,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구조화되

며, 각각의 요인 내에서 진행되는 변화 그리고 국면에 따른 두 요인의 상이한 접합 양식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이념형적 극단들’(국면A와 국면B), 그리고 그 사이의 과도기적 유형(국면C)을 추론해본 것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국가 권위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의 접합양식에 따른 이념형적 국면들

구분		종교 다원주의	
		강 합	약 합
국 가 권 위 주 의	강 합	〈국면A〉 • 국가가 종교 전반에 대해 강한 통제력 행사 • 국가 자신이 유사종교, 대체종교로 등장(시민종교-정치종교의 활성화) • 종교에 대한 분할지배와 종속적 포섭	〈국면C〉 • 국가가 대(對)종교 통제력 유지 • 시민종교-정치종교의 활성화 유지 • 과도적 종교부문의 안정적 관리
	약 합		〈국면B〉 • 국가는 종교 문제에 대해 중립, 무관심, 불개입의 태도 유지 • 국가의 탈성화(脫聖化)와 정치종교의 해체 • 과도적 종교부문 사이의 균형 추구

보다시피 <표 3>에는 두 가지 이념형적 극단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강한 국가 권위주의’와 ‘강한 종교 다원주의’가 결합된 유형(“국면A”)이고, 다른 하나는 ‘약한 국가 권위주의’와 ‘약한 종교 다원주의’가 결합된 유형(“국면B”)이다. 여기서 ‘약한 국가 권위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와 동의어이고, ‘약한 종교 다원주의’는 ‘과두적(寡頭的) 종교지형’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이다.

우선, ‘강한 국가 권위주의’와 ‘강한 종교 다원주의’가 결합된 국면(“국면A”)에서, 국가의 대(對)종교 전략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 어느 종교도 대중에 대한 독점적인 문화적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가 ‘종교부문 전체’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 (2) 국가 혹은 지배층이 사회의 도덕적 교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국가 자체가 일종의 ‘유사종교’(quasi-religion) 내지 ‘대체종교’(alternative religion)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시민종교 혹은 정치종교 현상이 활성화되는 것, (3) 종교지형 자체가 이질적인 종교들로 균열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국가가 종교영역에 대한 ‘분할지배’(divide and rule)와 ‘종속적 포섭’을 시도하는 것.

먼저 ‘종교 전반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관련해서, 이를 다시 ① 종교에 대한 법적-행정적 통제장치들을 통해 종교 전반을 국가의 관할 아래 두는 행위, ② 강제력을 앞세워 특정 종교의 내부 문제에 초법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행위, ③ 종교-비종교, 종교-종교의 경계를 정의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종교에 대한 법적-행정적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한 통제 시도(박정희 정권),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조치 이후 중립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통제(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 무인가(無認可) 성직자 양성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박정희, 전두환 정권), 종교법인법 제정 시도(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68년경부터 ‘국가안보와 질서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해석이 보수적,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확연히 기울어졌던 것¹⁰⁾도 이런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특정 종교(들)만을 겨냥한 법적, 행정적 통제 사례도 여럿이었다. 예컨대 불교와 유교 관련 법률에 의한 통제(미군정과 그 이후), 무당·박수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거나(이승만 정권)¹¹⁾ 무속의례(乮)를 경범죄로 다스린 일(박정희 정권), 1961년의 이른바 ‘국산(國產) 종교’ 통폐합 조치(박정희 정권),¹²⁾ 1964년의 창가학회 포교금지 조치(박정희 정권), ‘제례준칙’이나 ‘가정의례준칙’ 등을 통한 관혼상제 규제(박정희 정권),¹³⁾ 1980년의 10·27법난(전두환 정권), ‘1교단 1신학교’ 방침에 따른 개신교 신학교 정비(전두환 정권), 3군 본부 이전을 위해 계룡산 일대의 토착적 소수 종교들을 강제 이전시킨 일(전두환 정권), 상가 임대교회에 대한 단속(전두환 및 노태우 정권), 교

10)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대사상사, 1983, 99쪽.

11) 조선일보, 1957.3.10.

12) 이것은 군사쿠테타 주도세력이 “국산종교를 한 종교로 통폐합해버리겠다고 해서 강제로 교단들의 간판을 내리게 한 처사”로서, 이로 인해 1961년 9월에 단군계·수운계·증산계 12개 종단 대표들이 ‘동도교’(東道教)라는 통합 교단을 결성하여 그 해 12월에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바 있다. 노길명 외, 『한국민족종교운동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3, 293-295쪽.

13) 김상구, 『유림운동 50년사』, 도서출판 흥경, 1997, 171-178쪽 참조.

회 옥상에 설치된 붉은 색 네온 십자가에 대한 통제 시도(노태우 정권) 등이 그러할 것이다. 한편, ‘특정 종교 내부 문제에 대한 초법적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비로소 종결된 불교의 비구-대처 분류와 유도회 분류일 것이다. 불교분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 후로도 이따금씩 반복되었다. ‘종교-비종교, 종교-종교 간 경계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생활 풍토 조성 혹은 새마을운동 등을 명분으로 사주·관상·무속을 포함한 토착적 민간신앙들을 ‘미신’으로 낙인찍고 배척한 일(이승만, 박정희 정권), 정부기관으로 ‘교리심사위원회’를 두어 ‘종교’와 ‘사이비종교’의 정의를 내리고 후자를 단속하거나(이승만 정권),¹⁴⁾ ‘종교심의회’를 통해 일본계 종교를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포교를 금지시킨 일(박정희 정권)¹⁵⁾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신학교 통폐합 조치, 토착적 교단들의 통폐합 조치 역시 종교-종교의 경계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설정하는 행위였다.

두 번째로,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는 어느 종교도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다종교 상황에서, 혹은 그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유사종교 내지 대체 종교처럼 행동할 수 있다. 특히 신생 독립국가의 강렬한 민족주의 열기는 ‘민족주의’나 ‘민족국가’를 성화(聖化)하는 시민종교의 풍요로운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민족주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조’(國祖)인 단군(檀君) 숭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에 단군 성전 혹은 단군 동상을 건립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다.¹⁶⁾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주의’가 시민종교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올랐다. 전쟁영웅들, 현충일, 국립묘지, 수많은 전적지와 전쟁기념탑 등으로 구성된 ‘반공주의적 시민종교 체계’가 1950~1960년대에 구축되었다.¹⁷⁾ ‘국부’(國父)로 불리길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1950년대에 진행되었다. 박정희 시대에는 국기에 대한 배례와 맹세가 제정되거나 강화되었고, 이순신을 비롯한 난세의 영웅들이 대대적으로 기념되었고, 이들을 모신 충렬사들은 성지순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가정의례준칙’ 등을 통한 관혼상제 규제,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일상 복장 단속(장

14) 동아일보, 1958.9.25, 1958.12.30, 1959.1.10.

15) 해방20년사편찬위원회 편, 『해방20년사』, 희망출판사, 1965, 1171쪽.

16) 노길명 외, 앞의 책, 337, 339-340쪽.

17)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1)』, 역사비평사, 2006, 367-391쪽을 볼 것.

발 및 미니스커트) 등은 명백하게 국가가 사회의 윤리적 교사를 자임하는 행위들이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에 대해 여러 차례 ‘유시’(諭示)를 내리고,¹⁸⁾ 국가기관이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종교-비종교(미신, 사이비종교)의 경계를 설정하려 한 것 역시 국가가 종교마저 ‘지도’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했던 일들이었다. 시민종교-정치종교와 관련된 움직임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 정권에서 꽃을 피웠다. 전두환 정권 역시 ‘사회정화’(社會淨化)를 앞세워 사회의 윤리적 교사 역할을 떠맡으려 시도했다.

세 번째로,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는 기존의 종교적 균열을 이용하여 종교영역에 대한 ‘분할지배’와 ‘종속적 포섭’을 시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분할지배는 ① 종교(타협적 종교)와 종교(저항적 종교) 사이 ② 종교 내부의 분파 사이(타협적 분파와 저항적 분파)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가권력은 타협적 종교, 타협적 분파를 ‘후원과 포섭’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반면에 저항적 종교, 저항적 분파는 ‘배제와 억압’의 대상이 될 것이다. 후자의 사례가 1940년대 말의 천도교, 1950년대 후반의 천주교, 그리고 1970~1980년대의 개신교와 천주교의 진보세력들이었다. 특히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걸쳐 도시산업선교회는 국가와 타협적 개신교 분파의 협공에 의해 극심한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한편 국가권력은 잠재적인 혹은 부분적으로 현재화된 교단 내부의 차이와 균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보다 노골적으로 분할지배와 종속적 편입을 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 개입으로 인해 교단 내부 갈등은 더욱 장기화되고 격렬해질 수 있다. 불교 분규와 유교 분규의 사례가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장기화된 분규는 개입주의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종교적 종속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약한 국가 권위주의’와 ‘약한 종교 다원주의’가 결합된 유형(“국면B”)에서 종교를 겨냥한 국가의 전략은 “국면A”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종교에 대한 국가 전략은 (1) 종교 문제에 대해 중립, 무관심, 불개입의 태도 유지, (2) 과도적 종교부문 사이에서의 균형 추구 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 국가와 민족의 탈성화(脫聖化), 정치종교의 균열 및 해체라는 현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던 기존의 수단들은 효력이

18) 국어사전에 따르면, ‘유시’는 “관청 따위에서 국민을 타일러 가르침”을 뜻한다.

크게 약화된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 종교에 대해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은 조세제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주로 ‘돈’과 관련된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3대 종교의 힘은 더욱 커졌고, 선거정치의 활성화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영향력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국가와 정치사회는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극구 꺼리는 가운데, (종전의 국가를 대신하여) 시민운동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국가-시민운동-종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종교-국가 관계는 이전에 비해 한층 유동적인 것으로 변했고, 그만큼 예측하기도 어려워졌다.

위압적인 국가와 맞서 싸우거나 국가의 개입주의를 경계해야 할 부담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사회문화적 민주주의로 심화시켜 가려는 시민운동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주요 종교들 내부에서 ‘교단 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종교개혁운동’이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종교권력 담론’의 확산은 거대 종교들이 확보하게 된 막강한 정치적·사회적 힘을 쟁점화 할 뿐 아니라, ‘종교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측면 또한 갖고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60여 년의 역사를 조망할 때, 우리의 상황은 “국면A”로부터 “국면B”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권위주의의 약화’와 ‘종교 다원주의의 약화’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時差)가 존재하며, 이 과정이 진행되는 양상도 사뭇 달랐다. ‘국가 권위주의의 약화’ 과정이 1987년을 전후로 극적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던 데 비해, ‘종교 다원주의의 약화’ 과정은 이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해방 후 ‘종교 다원주의의 약화’ 과정, 혹은 종교지형의 과도적 재편 과정은 대략 다음의 네 국면들로 정리할 수 있다(〈표 4〉 참조).¹⁹⁾

〈표 4〉 해방 후 ‘과두적 종교지형’의 점진적 형성 과정

종교지형의 구조	시기	해당 종교
6대 종교	1945~1953년	불교, 유교, 대종교, 천도교, 개신교, 천주교
5대 종교	1954~1960년	불교, 개신교, 천도교, 천주교, 유교

19) 이 표는 강인철, 『전쟁과 종교』,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133-141쪽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4대 종교	1961~1965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3대 종교	1966년~현재	불교, 개신교, 천주교

〈표 4〉에서 보듯이, 무려 6개의 대규모 종교들이 특정 종교의 압도적 지배력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해방 직후의 종교지형은 그 후 대종교, 유교, 천도교를 신자 규모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의미 없는 세력으로 하나씩 밀어내면서, 불교·개신교·천주교의 ‘3대 종교 정립(鼎立) 구조’로 변화되었다. 1970년대 초에 모습을 드러낸 ‘3대 종교 정립 구조’는 국가 권위주의의 극적인 약화가 시작되는 1980년대 말에는 이미 상당히 고착된 상태였다. 예컨대 민주화 이행기 직전인 1985년 말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당시 3대 종교에 속한 신자들이 전체 종교인구의 95.3%를 차지할 정도로 나머지 모든 종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또 1985년 이후 20년 동안 3대 종교 내에서도 천주교와 다른 두 종교 간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6대 종교 병립(竝立) 구조’가 ‘3대 종교 정립 구조’로 변화된 이후인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를, ‘여전히 강한 국가 권위주의’와 ‘약화되는 종교 다원주의’의 접합양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과도적’ 국면, 즉 “국면C”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강한 국가 권위주의’가 유지되는 만큼, 이 국면에서도 국가가 종교 전반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하고, 국가가 윤리적 교사 역할을 떠맡으려는 경향은 여전할 것이다. 그러나 “국면C”에서 국가가 부딪치게 되는 난제는, 다른 종교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세 종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국면C”에서 국가 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면A”에서 두드러지던 ‘분할지배와 종속적 포섭 시도’가 약화되는 대신) ‘과두적 종교부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과두적 종교부문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로서는 3대 종교 가운데 최대 규모인 불교의 상대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들은 앞서 지적한 불교의 군중제도 참여 허용(1968년),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승인한 일(1975년)이었다. 군중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불교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전군

신자화운동의 성과를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었다. 1974년 8월 영부인인 육영수의 국민장(國民葬) 때부터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순서로 ‘3중(三重) 종교의식’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도 과두적 종교부문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1970년대 이후 개신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저항적인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불교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불교 전반을 지배질서 내로 확실히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개신교·천주교의 저항적인 부문들을 견제하려는 ‘분할지배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종제도에 배타적으로 참여한 개신교·천주교·불교가 전군신자화운동의 과실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천도교와 대종교의 항의,²⁰⁾ 그리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즈음에 자신들의 종교적 기념일도 공휴일로 제정해달라는 유교와 천도교의 요구²¹⁾ 정부에 의해 등이 묵살되었던 사실은 관련된 조치들이 과두적 종교부문(3대 종교)의 안정적 관리라는 고려가 앞선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까지의 ‘과도적 국면’ (“국면C”)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남아 있다. 국가에 대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두적 종교 부문 내부에서 ‘협력’이나 ‘저항’의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두터운 회색지대’가 형성되는 경향이 이 시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3대 종교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늦어도 1970년대 초에는 ‘저항적 사회운동’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보수-진보의 종교적·정치적 분화’가 진행되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1970년대에 저항적 사회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비교적 큰 세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20) 1973년 5월에 천도교의 최덕신 교령과 대종교의 맹천주 총전교는 종교차별을 이유로 전군신자화운동의 중단과 군종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육군 군종사』, 육군본부, 1975, 87-92쪽 참조.

21) 유교 측은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제정이 가시화되어 가던 1972년과 1974년의 유도회 총회를 통해 ‘공자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이를 공휴일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7538호)됨으로써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제정이 확정되자 같은 해 2월 유도회 총본부 임병진 위원장 명의로 공자탄신일의 공휴일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김상구, 앞의 책, 203-204쪽). 천도교 또한 1975년 4월 열린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천일기념일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총부가 강력히 추진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앞의 책, 538쪽). 천도교는 1986년 5월에도 ‘천일기념일’을 국정 공휴일로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동학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편, “연표”, 『동학혁명100주년 기념 논총(하)』, 동학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1994, 764쪽).

국가는 (과두적 종교부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매력적인 특혜들을 3대 종교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의 이미지는 이런 특혜들의 ‘전면적 포기’를 대가로 요구할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협력과 저항 ‘사이에’, 혹은 협력과 저항을 ‘오가는’ 회색지대가 두텁게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4. 새로운 국면으로의 이행?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종교-국가 관계는 다음의 세 국면을 거쳐왔다고 말할 수 있다.

- ① ‘강한 국가 권위주의’와 ‘강한 종교 다원주의’의 접합 국면(“국면A”): 대략 1945~1965년의 시기.
- ② ‘여전히 강한 국가 권위주의’와 ‘약화되는 종교 다원주의’의 접합 국면(“국면C”): 대략 1965~1987년의 시기.
- ③ ‘약한 국가 권위주의’와 ‘약한 종교 다원주의’의 접합 국면(“국면B”): 대략 1987~2007년의 시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우리 사회는 종교-국가 관계의 네 번째 국면을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로의 회귀’라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재(再)강화된 국가 권위주의’는 (정치, 경제나 다른 사회 부문들에서와는 달리) 적어도 종교부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충격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난 20여 년에 걸쳐 유지되어왔던 ‘과두적 종교부문 사이의 균형 추구’라는 국가 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대 종교만 놓고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3대 종교 사이의 균형 유지’보다는 확연하게 ‘개신교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신교 내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기총 사이의 균형 유지’보다는 ‘한기총으로 경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보수 개신교 편향’으로 압축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對)종교 전략 변화가 “국면B”의 균열을 초래하는 주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8년 8

월의 시국대법회로 상징되는 불교-국가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지만, 불교만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 전략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008년 9월 2~3일에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응답자가 전체의 59.3%에 이르렀지만, 같은 의견을 가진 불교 신자는 49.7%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의견을 지닌 천주교 신자의 비율(57.2%)은 불교 신자의 그것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은 무종교인 중 이런 견해를 밝힌 이들의 비율(62.2%)은 평균치보다도 높았다. 다만 개신교 신자만이 이런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41.6%)보다 공감하지 않는 비율(47.6%)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²²⁾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²³⁾ 소속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참석한 2008년 4월 29일과 2009년 6월 4일의 두 차례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의 ‘4중 종교의례’에서 주역을 담당한 이들의 면면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종교 전략이 어떤 균열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08년 4월의 청와대 오찬간담회는 이른바 ‘촛불정국’ 이전에 있었고, 나머지 두 행사는 이른바 ‘서거(逝去)정국’의 와중에 열렸다.

〈표 5〉 청와대 오찬간담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의 참여자들

정국의 특징	행사(일시)	참석자
촛불정국 이전	청와대 오찬간담회 (2008. 4. 29)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불교), 엄신형 한기총 대표회장(개신교), 김희중 주교(천주교), 최근덕 성균관장(유교), 이성택 교정원장(원불교), 김동환 교령(천도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서거정국	노무현 국민장 영결식 중 종교의식 (2009. 5. 29)	명진 봉은사 주지(불교), 권오성 KNCC 총무(개신교), 송기인 신부(천주교), 이선종 서울교구장(원불교)
	청와대 오찬간담회 (2009. 6. 4)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불교), 엄신형 한기총 대표회장(개신교), 김희중 주교(천주교), 최근덕 성균관장(유교), 이성택 교정원장(원불교), 김동환 교령(천도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22) 뷰스앤뉴스, 2008.9.5.

23)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1997년 3월 창립되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홈페이지(www.kcrl.org)의 ‘연혁’ 참조.

〈표 5〉에서 보듯이, 1년여의 시차를 두고 열린 두 번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중복되는 인물은 엄신형 한기총 대표회장(개신교), 김희중 주교(천주교), 최근덕 성균관장(유교), 이성택 교정원장(원불교), 김동환 교령(천도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의 다섯 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 번의 오찬간담회는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교체되었고, 주지하다시피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고사에 따른 것이다. 두 번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개신교 대표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 영결식에서 개신교를 대표했던 이는 KNCC 총무였다. 바로 이것이 촛불정국과 서거정국을 겪으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진행된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대비는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후’ 사이에 현저히 달라진 국면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 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을 읽고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먼저,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대 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 주신 강인철 교수님의 발표에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토론을 맡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논평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교수님의 이번 발표는 아시다시피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 장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장은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관계 연구:: 회고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를 총 11개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2장에서는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과 종교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 현상을 연구해 온 종교사회학자 오토 마두로가 제기한 방법론에 의거하여 국가권력의 (종교에 대한) 헤게모니 전략 및 그에 대한 종교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은 이 장에서 마두로가 제시한 지배층의 (종교에 대한) 헤게모니 전략으로 경제, 가족, 법과 정치, 교육과 문화, 억압 전략 등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종교 측의 대응전략으로는 최고 통치자에의 접근, 정당,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 선거, 사회운동 등 다섯 분야에 걸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3장 〈헤게모니 전략을 넘어서: 권위주의와 다종교 상황〉에서는 국가권력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와 ‘다종교 상황(종교다원주의)’이라는 두 축을 통해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주의’는 한국 국가권력이 지닌 특성을 대표하는 개념이고, ‘다종교 상황’ 역시 한국적 종교상황의 특성을 대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 교수님께서서는 ‘권위주의’와 ‘다종교 상황’이라는 양자 관계 중에서도 주로 ‘강한 국가권위주의-강한 종교다원주의가 결합된 유형’과 ‘약한 국가권위주의-약한 종교다원주의가 결합된 유형’을 중심으로 양자의 전략과 대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4장 〈새로운 국면으로의 이행: 결론을 대신하여〉에서는 ‘이명박정부’ 들어서 국가권력과 종교 사이에서 벌어진 몇 가지 ‘상징적 사건’을 중심으로 향후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관계를 전망하고자 하고 있다.

편의상 각 장별로 논평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1장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우선 저는 강 교수님께서 한국 학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종교-정치-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지적(2쪽, 4행-20행), 그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제기하신 11개의 과제 제기(2쪽 하단부터 7쪽 상단)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정치-국가(권력)라는 존재가 지닌 ‘무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새로운 인식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나 국가권력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시민들

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배’ 현상은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 역시 알게 모르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작년 2학기에 <종교와 원불교>라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일간신문에 나타난 종교관련 기사를 하나씩 스크랩하고, 그 기사를 읽은 소감과 함께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의 과제는 제가 원광대에 재직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매 학기 빠짐없이 내주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학기에는 예년과는 다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불교관계 기사가 폭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불교 관계 기사가 많아 졌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정책”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사회 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도 드물고, 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도 드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해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나 관점(연구방법론, 연구윤리 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제 2장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오토 마두로가 분석한 지배층의 헤게모니 전략의 상세한 내용은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이 얼마나 ‘교묘하며’ ‘복합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강 교수님께서 오토 마두로의 관점을 소개하신 것은 국가권력의 (종교에 대한) 헤게모니 전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교수님께서도 제 1장에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마두로가 주로 분석한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두로가 제기한 다섯 가지 전략 외에 한국적 상황(식민지 경험, 분단체제, 강한 민중운동의 전통, 다종교 상황 등등)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적 상황 때문이기 때문에 마두로가 지적한 다섯 가지 전략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의 전략이 더 강조되거나 또는 덜 강조되거나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논평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종교 측의 대응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3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제 3장은 국가권력과 종교 관계에 있어 제 2장의 마두로의 헤게모니 전략을 뛰어넘어 한국적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려는 강 교수님의 독창력 사고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권위주의’와 ‘다종교 상황(종교다원주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국의 국가권력과 종교와의 관계를 분석한 점은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데서 나온 탁견이라고 봅니다. 논평자는 강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3섹터’ 즉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운동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진전에 따라 1990년대 들어 크게 활성화되었고, 그 집대성은 작년 5월의 ‘촛불집회’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엠네스티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신개념의 군중행동) 그런데 이 같은 시민사회운동은 정치에 대해서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활발한 발언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시민사회운동은 이른바 성역으로 불리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운동은 특히 종교에 있어 하나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엔티 기독교 운동이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같은 시민 단체의 등장, 평신도 또는 재가운동의 활성화 등) 강 교수님께서 이 같은 시민사회운동이 정치와 종교 양쪽에 하나의 ‘변수’로써 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끝으로 정치(국가권력)와 종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 해보았으면 합니다. 강 교수님께서도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에 있어 종래의 ‘저항-협력’이라는 이항대립(二項對立)적 관계를 떠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종교의 ‘저항’ 중에는 교리나 신앙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저항하는 경우도 있지만(예컨대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나 70년대 반민주화운동 등), 세속적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저항하는 경우(김대중 정권 이후 보수기독교 세력의 우익화 현상에 따른 저항)도 있다고 봅니다. ‘협력’의 경우에도 교리나 신앙에 의거한 일관성 있는 협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오히려 세속적 이해관계를 내세운 기회주의적 협력도 있을 것입니다.

• 2주제 •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의 길에 들어섰나?**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의 길에 들어섰나?

백찬홍 · 재단법인 씨알 홍보위원장

1. 들어가는 글 : 한국종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와 승자독식 시스템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며 인류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모든 제도가 인간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생존경쟁은 원칙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 경영자,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경쟁에 승리하면 선이고 패배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조차 시장이 결정하고 빈부격차로 신분상승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렸지만 이를 능력사회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세계적 확장과 무한경쟁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 부문을 넘어서 정치사회문화종교 영역까지 파고들어 수많은 저항에

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영역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의 잠재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최전선에 서있는 한국 사회도 특권층 우선정책에 매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런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종교 조직 역시 대중의 고통을 끌어안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분주하다. 물량주의와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된 종교교파 간의 지나친 경쟁은 결국 종교의 상품화와 종교상호 간의 배타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종교의 본질인 영성의 고양과 삶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에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계량화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암투와 배타적 경쟁으로 대중들은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독교²⁴⁾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는 특유의 배타성과 신자유주의 가치관을 앞장세워 불교를 비롯한 타종교를 끊임없이 폄하하고 종교를 시장 질서에 편입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횡령, 사기, 성폭력 등 자신들의 불법 및 비리와 관련한 행정과 사법의 개입에 대해서는 종교탄압으로 간주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선거 때면 어김없이 자신들과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장로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등 종교권력의 부정적인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로부터의 공격에 직면한 불교계 역시 이에 맞대응하면서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왕조 5백 년 간의 억압,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의 유산, 역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고초를 겪은 불교는 지난 시절 산중불교로서의 비대중적 행보, 비구·대처 간의 분열, 종권과 사찰을 놓고 벌이는 문중파벌 간의 폭력 대결을 통해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종교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80·90년대 실천승가화재가연대 등 진보·개혁세력의 등장으로 혁신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템플스테이 등을 비롯한 현대화 작업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에 맞서 대규모 반정부집회를 개최하는 등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천주교(가톨릭)는 50년대까지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으로 제사 등 전통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 중앙집권적 관리체제, 70·80년

24) 이 글에서 기독교는 개신교(Protestantism)를 말하며 천주교(가톨릭, Catholic))와 구별된다.

대 고 김수환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 등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의 3대 종교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기독교계의 부패와 비리, 물지각한 행동으로 기독교 출신의 개종자가 늘어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천주교 역시 중산층의 대거 유입과 추기경·주교단 등 지도부의 총보수화, 성장주의 확산, 성직자들의 성추문과 재정비리 등이 만연하는 등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을 닦아가고 있다.

2. 기독교 : 배타적 선교와 물량주의로 공신력은 최악

2-1 :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토대를 형성한 근본주의

오늘날 한국 기독교 유산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본주의 신학과 신앙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적 교리로 무장해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 되어 종교 간의 대화나 협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국주의적 선교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제3세계 종교에도 위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성장했다. 미국 기독교는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일어난 종교적 격변기²⁵⁾를 거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근본주의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바 이블벨트²⁶⁾라고 부르는 미국 남부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되었다.

근본주의는 오늘날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복음주의’의 뿌리가 근본주의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친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근본주의는 존 다 비라는 인물로부터 유래한다. 영국 성공회 신부 출신인 그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확대와 농촌붕괴, 종교의 세속화 등으로 영국 사회가 혼란과 타락,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성서만이 정확한

25) 18세기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식민지인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2차에 걸쳐 일어난 미국판 종교 개혁운동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을 말한다.

26) 1920년대 초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시사해설가인 헨리 루이스 맥켄이 붙인 말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미국 남부 일대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주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지역은 미국 남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등이 득세하고 있다.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서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왕국주의(Dispensational Premillennianism)²⁷⁾을 내세웠다.

다비는 한동안 유럽에서 활동한 후 1859년부터 1874년까지 미국을 여섯 차례 방문해 주요 도시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전파했다. 그의 카리스마적 설교와 저서들은 미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세대주의 천년왕국주의는 당시 유행했던 성서대회(한국에서는 사경회라고 함)를 통해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맹아가 되었다. 세대주의는 점진적인 후천년주의²⁸⁾에 비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코 이 시대에 혹은 인류사에서 실현되지 않고 인류 역사가 끝난 다음의 미래에 존재하게 되며 그 시작은 완전히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역사와는 단절된 것이라고 보았다. 세대주의자들은 창조 이후의 세계를 일곱 세대로 구분했다. 첫 세대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에 떨어지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남으로써 끝이 났고, 두 번째 세대는 노아시대로 홍수와 더불어 끝났으며, 세 번째 세대는 바벨탑과 더불어 끝났으며 현재는 여섯 번째 시대인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도 파멸에 이르러 신의 심판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7년에 걸친 전쟁과 대환난이 있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고 천 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²⁹⁾

존 다비와 함께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미국 동부 볼티모어 출신인 사이러스 스코필드라는 인물이다. 1909년 그가 펴낸 관주성경은 근본주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상세한 각주와 참조를 통해 성서를 쉽게 통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수백만 부가 팔렸고 결과적으로 세대주의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27) 인간들에 대한 신의 구원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가 재림해서 천년동안 다스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천년왕국운동중에서 성서를 가장 문자적 그리고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28)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끝에 재림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라든가 7년의 환난기간도 상정하지 않으며 천년왕국이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믿는 천년왕국은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들이 이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본다. 후천년설은 17~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인류 역사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29)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교회(가톨릭)가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회복(독립)되면 40년 내지 50년 후에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의 순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미국의 침례파, 성결파,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교회로 널리 알려진 오순절파 교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팻 로버트슨 같은 미국 기독교 우파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를 신봉하고 있는 자들이다.

관주성경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널리 읽히면서 당시 보수주의자들이 경계했던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신학으로부터 근본주의 신학을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관주성경의 영향으로 일반 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세대주의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향은 미국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신도들이 관주성경을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

세대주의를 통해 형성된 근본주의는 성서의 모든 내용은 신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일침일획도 틀릴 수 없다는 철저한 문자주의에 따라 성서무오설을 확신하고 있다. 신학은 확고한 정통주의 교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신앙관에 있어서도 매우 배타적이어서 타종교는 물론이고 가톨릭(천주교), 심지어는 신앙 노선을 달리 하는 기독교 교파들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20세기 초 미국 내에서 근본주의자가 각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세가 강한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의 기독교 전통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⁰⁾ 또 외부 세계와 문화에 대해서는 악으로 규정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신이 아닌 자연선택에 의해 오늘날 인류가 출현했다는 진화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적그리스도세력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³¹⁾

역사관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든 일을 신의 뜻으로 돌리는 섭리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회출석, 성경 읽기, 교회활동, 기도생활, 헌금봉헌 등 교회에의 헌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천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도덕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게 음주는 금지된 행위의 으뜸이고, 그밖에도 음담패설, 사교춤, 포르노, 록음악 등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등 우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빈곤문제 등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의 문제로 돌려 구조적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권위주의 의식이 강해 성경과 함께 성직자의 권위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남성우월주의적인 성향도 교회와 가정 내부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30) 이탈리아 등 라틴계 유럽 이민자들의 급증은 노동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를 믿는 앵글로색슨계 하층 노동계급에 위협이 되었고 이것은 근본주의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1) 이원규,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2.20.149~157쪽 요약.

일을 신자의 우선적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의 성령체함과 중생의 경험을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지성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근본주의는 당시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의 지지에 힘입어 더욱 영향력이 커졌고 무디는 요한 계시록 20장의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 예수 그리스도가 천 년간 지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무디의 가세로 세대주의운동은 종말 전에 세계복음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19세기 말 시작된 미국판 지리상의 발견 시기에 형성된 제국주의적 대외팽창정책에 호응해 해외선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열기에 부응해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영향은 한반도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이야말로 신으로부터 인류 발전을 위한 임무를 수여받았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의식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측면에서 각기 구체화되었다. 즉 인종적으로는 앵글로색슨 계통의 백인,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정치적으로는 자유기업주의에 기초한 삼권분립의 민주정치체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보다 열등한 인종과 민족들을 문명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15·16세기 스페인·포르투갈 정복자들이 남미 인디오들을 이교도나 동물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파괴했던 것처럼 미국 선교사들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등 아시아 각지의 종교와 문화를 무시하고 미국 문화와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선교활동을 펼쳐나갔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윤치호·서재필·안창호 같은 민족 개량주의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서울은 물론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과 동학이 붕괴된 호남지역에서 많은 신자들을 확보했다.³²⁾ 당시 대중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탐관오리나 일제 침략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치외법권지역으로 생각했고 일부 청년학생들은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양대인(洋大人)으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고 1905년 미국과 카쓰라·태프트조약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선교사들의 활

32)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종교인구중 기독교가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호남에서 서울로 이주한 사람이 많았고, 해방 전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동이나 교회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간섭을 하지 않았다. 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 서구식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등 근대화에 일부 기여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들이 가진 제국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신앙관이 되면서 이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적 종교관에 입각, 유교식 제사나 불상에 대한 절, 무당들이 벌이는 곳을 우상숭배나 미신으로 간주해 교인들에게 철저히 금지시켰다. 또한 음주흡연도 비도덕적인 일로 간주해 배격했다. 일부 선교사들은 아예 조선이 멸망한 것은 당쟁과 같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불교나 유교 같은 후진 종교를 믿고 지나친 음주와 도박으로 근로의욕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윤치호 같은 인물은 유교나 불교를 조선근대화의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로 취급할 정도였다.

“나는, 몇 사람의 지식인에게만 추상적인 사색의 특권을 부여하면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에게 난삽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교리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영적인 죄악과 퇴보 속에서 살고 죽게 만드는 종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기독교가 분명하고 실증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고상하기 때문이다.……고도의 논리학을 대단히 잘 구사하는 불교 신자나 유교 학자는 평범한 기독교인과 토론을 한다면 기독교인을 쉽게 궁지에 내몰 수 있다. 그러나 실천에 옮겨진 기독교의 위세와는 아무것도 비교될 수 없다.” (1893년 12월 17일)

“불교 신자나 유교 학자를 대할 때 지나치다 싶은 급진성을 보여주어도 된다. 조선인의 정신과 마음속에서 하도 쓰레기가 많기에, 대대적인 청소가 가장 시급한 것이다.” (1893년 12월 19일)

“불교는 이미 망하게 되어 있는 종교다. 일본, 조선, 중국의 불교 신자들이 불교 교리에 몇 개의 근대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불교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개혁될 불교는 이미 불교가 아닐 것이다.” (1893년 12월 24일)

“실천에 옮겨질 수 없는 종교는 무신론보다 더 나쁘다.……내가 기독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 실천의 훌륭함이다.” (1894년 1월 1일) ³³⁾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로교의 경우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 성장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설립

33) 국사편찬위원회 편, ‘윤치호일기’, 1974년, 제3권, 228-243쪽, 박노자, ‘19세기말-20세기 초의 서구 선교사들의 韓國佛敎觀’, 인물과사상 2003년 3월호에서 재인용.

자 겸 초대교장인 사무엘 마펏(Samuel H. Moffett)이다. 그가 졸업한 인디애나주의 매키 신학교는 매일 찬송가와 성서를 읽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으며 학장과 교수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오후 예배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미션스쿨’이었다.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신학교는 청교도적 엄격성, 경건성을 표방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마펏은 1901년 평양신학교를 설립해 24년까지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이자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이끈 길선주, 한석진, 이기풍, 서경조, 양전백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교역자를 양성했다. 그는 신학생들에게 보수적 칼뱅주의에 입각해 청교도적인 삶을 살도록 강조하면서 엄격한 신앙훈련을 시켰다. 마펏은 평양신학교 외에 평양숭실학교 교장, 조선예수회장로회 제8대 총회장을 지낼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구한말과 일제하 한국 장로교는 그에 의해 양육되고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특히 그가 활동했던 평양은 1894년경 전국의 교회 237개 중 185개가 세워질 정도로 전도활동이 왕성했으며 1907년의 대부흥운동과 1909년의 100만인 구령운동의 본거지가 되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렇듯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은 16세기 칼뱅주의 근본원리와 17세기 청교도신앙, 정통을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³⁴⁾을 바탕으로 한 보수신학을 섭취했던 인물들이었고 유럽과 미국동부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장로교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감리교 선교사나 캐나다나 영국을 배경으로 한 선교사들 역시 장로교 선교사들과 유사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근본주의 선교사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은 전통종교, 특히 불교를 불상을 모신다는 이유로 우상숭배종교로 간주하면서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들은 승려들을 포함한 모든 불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민족이 미국처럼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기독교국가는 잘 살고 불교국가는 못 산다는 장경동목사의 발언은 한국 목사들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평신도들 역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불상파괴 등 훼불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3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정통신앙고백서로 기독교인들의 신학과 신앙, 일상적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충족성과 계시의 최종성(종결성)에 근거하여 성경의 기록된 계시 이외의 어떠한 예언이나 새로운 계시내용도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로교보수파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따르지 않는 종파는 이단으로 간주해 교황을 기독교의 적으로 규정하고 가톨릭과 관련된 어떤 행사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

이처럼 근본주의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 성립된 한국 교회에 대해 춘원 이광수는 1920년에 이미 <금일 조선 아소교회의 문제점>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했다.

- 조선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고 계층적이다.
- 조선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분화해서 교회에만 치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세상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한다.
- 상당수 개신교 목사들의 수준이 형편없다.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안다. 한민족을 계몽하자면서 미신적 신앙을 전수하니 이게 웬 말이나?
- 조선교회는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모두 합쳐서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졌는데, 어째 조선에는 제 소리 하나 없이 다 가져온 것이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자주성)이 없다.
- 선교사들과 그들이 인정하는 몇몇 개신교 목사들이 성서 해석의 독점권을 가졌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성서를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조선의 기독교는 감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한다.³⁵⁾

이광수가 비판한 내용이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주의 신앙과 신학이 한국 기독교의 배타주의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2-2 : 신정국가론은 근본주의의 정치적 지배를 위한 욕망

이명박 정권 등장과 함께 불교도들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행위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앙정부자치단체 공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성시화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정국가론(神政國家論)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정국가론은 말 그대로 국가가 신의 뜻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는 성시화운동과 기독교정당 추진 등

35) 신광식, '19세기말~20세기 초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42쪽 재인용.

으로 구체화되었다.

성시화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칼뱅이 제네바를 성시화하면서 종교개혁의 중심도시가 되었던 것을 모델로 한국에서는 1972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현재는 자치단체장 등 지역 공직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39개 도시에서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시화운동 측은 성시화운동의 주요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확산 ▲하나님 나라 주권의 확립 ▲하나님 나라 영토의 확대를 들고 있는데 전용태 성시화운동 본부장(전 춘천지검장)이 성시화운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시화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된 한국의 성시화 운동은 한 도시만이라도 완전 복음화하고 성시 모델 도시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하나님 나라 백성의 확산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확산시키셨는데 성시화 운동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산하는 운동이다.

(2) 하나님 나라 주권의 확립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립하셨는데 성시화 운동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확립하는 운동이다.

(3) 하나님 나라 영토의 확대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하여금 온 땅을 정복케 하셨는데 성시화 운동은 온 세상의 땅(이방문화와 이방 종교)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대하는 운동이다. ³⁶⁾

이 같은 목적으로 볼 때 성시화운동은 결국 국내외적으로 불교 등 타종교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부산성시화운동이 주도해 2006년 6월 4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36) 성시화운동신문, 2009년 4월 21일자.

‘Again 1907 in Busan’ 행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기독교 인들은 통도사와 범어사·해인사·표충사 등 부산·경남지역의 유명 사찰들을 거명하면서 ‘사찰이 무너져야 한다.’고 통성기도를 올렸으며 이 내용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포되면서 불교계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기독교 공직자들이 적극 협조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이다. 성시화운동과 관련해 가장 크게 물의를 일으킨 인물은 2004년 5월에 열린 포항성시화대회에 참석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다. 그의 발언에 분노한 불교계는 성토집회를 갖기까지 했으나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정 전시장이 재직하는 동안 포항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각급 기관장과 평신도들이 각각 분과 및 직능별 홀리클럽(Holy Club)을 조직, 매주 성경공부를 했으며 성시화 신문 발간, 교회일치운동, 범죄 없는 포항운동 등을 벌이며 ‘예수 포항’ 만들기에 적극적이었다. 성시화운동 측은 이 같은 자발적인 활동으로 포항시의 복음화 비율은 불교세가 강한 영남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20%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 교회와 동사무소를 연계한 ‘교동(敎洞)협의회’를 추진한 성북구 서찬교구청장, 인천을 복음도시로 만들겠다는 안상수 인천시장, 여수세계박람회를 복음박람회로 만들겠다는 오현섭 여수시장, 공문시달시스템을 이용해 기도회 참가를 독려하고 근무시간에 통성기도를 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도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반했다며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자치단체장 등의 편파적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등을 줄이는 등의 합당한 제재나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를 무시하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재는 계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시화운동과 함께 신정정치를 구체화한 것이 기독교정당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시작한 정치참여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기독교정치운동을 이끈 인물들은 유명 TV부흥사인 팻 로버트슨³⁷⁾, 제리 폴웰을 비롯해 ‘국가기도의 날’을 주도해온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Family)’의 창립자인 제임스 돕슨 목사, 1996년 ‘미국의 회복을 위한 센터’를 설립,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와 국가 안에서 성서적 덕성에 기초한 문화를 발

37) 그는 한국전쟁 때 해병대원으로 참여했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유대가 돈독했다. 1979년 11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10만 명 돌파 기념예배 때 주강사로 참여했고, 2006년 2월 조용기 목사 목회 48주년 기념행사 때도 축하영상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도폭발운동’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 등이 있다. 이들은 1960년대 진행된 흑인 급진주의와 페미니즘, 마약, 동성애, 낙태 등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고 비판하며 수천만 명에 달하는 고정적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과 정신을 전달하고 신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다. ‘도덕적 다수’를 창설한 폴웰은 진보적인 여성운동, 동성혼의 합법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음란잡지나 비디오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알려주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의 성서읽기와 기도회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은 청교도들에 의해 성립된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팻 로버트슨은 1998년 자신이 직접 신정정치의 대리인임을 선언하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섰고 낙선한 후에는 1989년 기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을 창립했다. 랄프 리드라는 탁월한 활동가를 영입한 기독교연합(Christian Coalition)은 공화당의 하부조직을 장악한 후 역사학 교수 출신의 뉴트 킹그리치 등 보수파와 연대해 공화당내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 기독교우파와 킹그리치는 유권자들에게 당시 클린턴 정부와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면서 행정부와 유착해 거대한 관료주의를 형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은 물론 남부를 중심으로 한 온건보수층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썬치와 자석’(Wedge & Magnet) 전략을 통해 1994년 총선에서 압승했다.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데 일등공신이 된 기독교우파는 2000년·2004년 대선에서도 공화당 부시후보를 적극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전성기 때 기독교우파는 상하원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넘는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기독교 우파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자 1960년대 반문화와 마약, 성적 방종의 상징적 인물인 클린턴이 대통령 지위에 있다는 것에 심한 혐오감을 느끼고 르윈스키 사건을 빌미로 탄핵을 추진했다. 한편으로 미국 헌법과 정책 속에 내재된 종교적, 도덕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많은 단행본과 비디오를 제작, 보급했고 구약성서에서 신정정치를 실현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예로 들면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옹호했으며 반낙태, 반동성애 등 보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백악관이나 의회에 로비스트들을 파견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공화당의 정강에 동조해 국방비 증액 요구, 세금감면, 사회복지 예산증

액 반대를 외치는 등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외교 문제에도 깊이 개입했다. 진보주의자들이 제3세계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탄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반대로 이들은 이슬람,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의 선교사들이 종교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하며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한 후 아랍권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나고 미국 선교사가 테러를 당하자 반이슬람운동을 전개하고도 있다. 실제로 2002년 6월 미국 근본주의의 기반인 남침례교의 제리 바인스 전 총회장은 “기독교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반면 이슬람교는 12명의 부인을 둔 귀신에 사로잡힌 마호메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의 마지막 부인은 9세 짜리 어린 소녀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이슬람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인스는 또 “이슬람교의 신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느님과 전혀 다르다. 알라는 여호와가 아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인스의 이 같은 발언이 있는 직후 이슬람교는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과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이 즉각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발언 직후 열린 남침례교 연차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텍사스 출신 잭 그레이엄도 “바인스 목사의 발언은 정확한 것이었다.”며 바인스를 두둔했다. 또 제리 폴웰 등 몇몇 근본주의 지도자들도 바인스를 지지했다.³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쓴 기독교 근본주의가 미국 정치권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자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정당 창립이다. 국내에서 기독교정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2003년 10월 한국새벽기도운동본부(대표회장 나겸일 목사)가 개최한 ‘한국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 모색’ 심포지엄에서 유명 부흥사인 신현균 목사가 기독교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부터였다.

2003년 11월 국가기도회 포럼(대표회장 조용목 목사)에서 김준곤 목사(성시화운동 총재)도 기독교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2004년 2월 서울에서 기독교 목사, 김준곤 목사, 전 한기총회장 김기수 목사, 8·15국가기도회 상임회장 박영률 목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발기인대회를 열고 기독교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발기인대회에서 김기수 목사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독교 사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의 결의문과 함께 핵심정책으로 ▲헌법 준수 ▲국민의 삶 향상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한미동맹

38) 국민일보, 2002년 6월 26일자.

강화 ▲국민화합 ▲국민통합 등을 내세웠다. 기독교당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한 것은 참여자들의 기본인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곤 목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중 기독교인이 37%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독교인들이 120% 나서서 투표하면 틀림없다고 주장했으며 조용기 목사 또한 정치권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혼돈에 빠진 한국사회를 성령의 역사로 바꾸자고 역설했다. 기독교당 추진인사들은 2004년 3월 말 63빌딩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상임대표 최수환 장로, 상임대표고문 김준곤 목사, 상임고문 김기수, 박영률, 조용기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예배 설교를 맡은 김준곤 목사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청교도를 통해 미국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세계 패권을 쥔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회가 예산을 세워 정치권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악(政治惡)을 향해 충(忠)을 쏟다면 기독교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금 한국사회는 강도당한 상황이며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어둡고 썩어 있는 정치에 기독교인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⁹⁾ 기독교당은 출범을 전후해 많은 저항에 직면했다. 공의정치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복음과상황, 새벽이슬 등 기독교내 개혁세력들은 지난 50년간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의회정치가 실패했으며 기독교당 창당에 적극 개입한 주요 인사들이 지난 날 독재 권력에 협조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한국정치를 정화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계 여론도 부정적이었는데 당시 교계 전문지인 <뉴스앤조이>와 갯피플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86%가 기독교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독교당 관계자들은 민주노동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자신 있다고 호언하고 지역구에 30여 명을 출마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최종적으로 지역구에 3명의 목사를 포함해 9명이 나섰고 비례대표 후보도 황산성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에 그쳤다.

결국 기독교당은 그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1%(약 22만 표)에 머물렀고 지역구에서도 역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투표할 때에는 지역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성향을 오판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당은 2004년 총선패배 이후 ‘기독교민주복지당(기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7년 대선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망교회 장로 출신인 한나라

39) 뉴스앤조이, 2004년 3월 23일자.

당 이명박 후보에 묻혀 흐지부지 되었다. 또 2008년 기독교사랑실천당으로 이름을 바꾼 기독교당은 ‘기호 8번을 찍으면 나라의 팔자가 바뀐다’는 비상식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18대 총선을 맞이했으나 개표 결과 44만 표를 획득, 정당투표 득표율이 2.6%에 그쳐 1명의 후보도 국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18대 총선에서 기독교당이 획득한 득표(44만 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획득한 22만 표에 비해 2배나 늘었지만 비례대표 당선 기준(52만 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기독교당은 두 번의 총선 참패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고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교계 주요 인사들도 외면하면서 재기불능상태에 있다.

2-3. 정치투쟁을 통한 기독교 수호

박정화전두환 정권 시절 기독교 진보세력의 민주화운동을 정교분리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던 보수기독교 세력은 1997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자 용공 친북정권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반정부적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김대중 정부와 맞선 것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던 밀월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군부통치시절에 권력에 협력하고 각종 혜택을 받은 인사들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후 김상근·이재정 등 진보 기독교 성직자들이 국회의원과 제2건국위원장 등으로 승승장구하자 자신들의 기독교가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김대중 정부와 보수기독교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금란교회 담임목사인 김홍도 목사의 비리가 공중파 방송인 MBC와 SBS 등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되면서였다. 순복음교회와 금란교회 측은 두 방송의 보도가 정권에 의한 보수기독교 진영 죽이기 음모로 간주하고 김대중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자신들이 독재에 협력하고 92년 대선 때 ‘김영삼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등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시기 조선중앙동아 등 수구언론들도 세무조사를 받으며 사주들이 구속되는 등 김대중 정부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보수교회와 자신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판단한 월간조선은 2001년 9월호 ‘친북 세력에 대항할 세력은 반공 기독교 뿐’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독재자 김정일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기독교의 적'이며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보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보수 기독교 교단이 왜 친북세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교계를 자극했다.

이 당시 <월간조선>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년 간에 걸쳐 조용기·김장환 목사 외에 순복음인천교회 최성규 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회장 등 보수교단 목사들을 집중 인터뷰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갑제 대표는 또 순복음교회 등을 직접 방문해 김대중 정권이 방송을 동원해 반공의 보루인 한국 교회와 민족지인 조선일보를 탄압했다면서 한국 교회가 반김대중·반공산주의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2003년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 '좌파세력의 정권연장'으로 간주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선기간인 2002년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압사하면서 해방 이후 최대의 반미시위가 계속되고 여기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밥만 먹으로 가거나 사진이나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발언하자 미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했던 보수기독교 세력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의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정치사회적으로 반미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군부통치와 협력했던 자신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해 12월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자신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느낀 보수기독교 세력은 본격적으로 실행행사에 나섰다. 2003년 1월 11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통해 노무현 당선자를 압박했다. 같은 해 3월 1일에는 극우단체와 함께 수만 명을 동원해 '반핵 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기 위해 광장을 대형성조기로 채웠고 좌경세력 척결과 북한정권의 붕괴를 외쳤다. 보수기독교 세력의 친미반북집회에 고무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한기총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에게 미국에 대한 지지에 대해 감사한다며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나서자 한기총과 300여 수구보수단체는 2004년 10월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 10만 명 이상을 동원해 '10·4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도 초대형 성조기와 태극기가 휘날렸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충신

교회 박종순 목사, 한기총 명예회장 김기수 목사 등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좌파정권 종식, 북한 정권 붕괴 등을 외쳤는데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며 더 이상 간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가 친공친북좌경 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총집결했고 개정 이후에는 법의 원상복구를 위해 한나라당과 연대해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다. 2007년까지 2년여에 걸쳐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벌인 보수기독교 세력은 △개방형 이사제 △임원 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대학평의회 심의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요구했다. 기독교 사학들은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시 이사 파견 거부와 학교 폐쇄는 물론이고 2007년 대선과 총선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후보들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마치 1978년에 미국의 카터 정부가 사립학교의 소득공제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하자 기독교우파 지도자 제리 폴웰 등이 기독교 계통학교와 근본주의자들을 선동해 공화당을 지지하도록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1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이용규 목사는 2007년 대선에선 기독교계가 원하는 정책을 집대성해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밝혔으며 회장 후보 시절에도 당선되면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기독교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대선 후보들의 애국관과 윤리·도덕, 사상과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기독교 세력이 당의 전통지지층이며 여론 주도층이라는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과 적극 연대했다.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기독교단체들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원한 장로출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자 올 4월 말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 : 종교시장을 평정하는 목사기업가들

한국의 기독교회는 구한말 이후 현재까지 미국을 해방과 구원의 담지자로 추종하

고 모방해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성장한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미국 교회의 성장과 관계된 형식이나 전략을 그대로 복사해 미국식 설교, 음악, 예배, 성장모델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왔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마치 그것이 교회 성공의 비결이나 되는 듯 유행처럼 번지면서 교회 강단과 세미나를 독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회 구성원 대개가 그러한 전략을 위해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식 교회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영성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대기업의 마케팅기법을 도입해 철저하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것을 곧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3천명 이상의 대형교회를 메가 처치(Mega Church)라고 부르는데 미국 하트포드 신학대학원 스캇 씨머 교수는 미국에는 대략 1200에서 1500개의 메가 처치들이 있으며 신자는 등록신자는 1천만에서 1천5백만에 매주 출석자가 약 4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메가 처치의 대다수는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⁴⁰⁾

메가 처치의 목회자들은 마치 대기업 CEO처럼 활동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목사기업가’(pastorpreneurs, 목사를 일컫는 ‘pastor’와 기업가를 지칭하는 ‘entrepreneur’의 합성어)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매스미디어와 첨단 마케팅기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교인들을 고객처럼 다루고 있다.

목사기업가들은 영적생산물(?)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 지친 중산층을 위로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복음주의 전통에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을 섞어 일반 신자뿐 아니라 지식인 층까지 끌어들이면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메가 처치는 청소년들이 운동과 데이트를 하는 공간으로, 도시외곽의 사커맘(soccer mom)⁴¹⁾들이 동료들을 찾아 자유롭게 대화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⁴²⁾

40) 2005년도 조사결과, 텍사스 주(174개, 14%), 캘리포니아 주(169개, 13.7%), 플로리다 주(83개, 6.7%), 조지아 주(64개, 5.2%)등이었다. 텍사스 주의 휴스턴과 댈러스에 미국 메가 처치의 4.5%가 몰려있다. 메가 처치들의 소속교단은 대부분 남침례 교회, 하느님의 성회 교회, 또는 독립 교회 등에 소속되어 있다. 스캇 씨머, 초대형 교회 전략 세미나’ 발표문, 미니스트리 디렉터, 2005.5.30.

41) 자녀들을 각종 랫슨과 축구나 야구클럽으로 실어 나르며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열성 엄마들을 말한다.

이러한 목사기업가들의 원조는 로버트 솔러 목사라고 할 수 있다. ‘확고한 믿음과 진취적 신앙의 대가’ 또는 ‘영혼을 올리는 이야기의 달인’으로 알려진 그는 자동차 극장과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응용해 1955년 캘리포니아의 가든 그로브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타고 예배참석이 가능한 크리스탈처치를 세운 인물이다. 이 교회는 외벽이 유리로 되어있는 데다 FM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해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로버트 솔러는 ‘능력의 시간’(The Hour of Power)이라는 방송 설교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명의 고정 신자들을 확보했고 그의 저서인 〈미래를 여는 힘〉, 〈긍정의 삶〉 등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그래함 목사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의 매우 정교하게 상품화된 설교는 60~70년대 한국 교회 성장을 이끈 부흥사들의 구미에 맞았고, 웅장하면서도 최첨단 시설을 갖춘 크리스탈처치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필수 방문코스였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로버트 솔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걸었으며, 서울 강남의 임마누엘 교회의 경우는 크리스탈처치를 모방해 전체 외벽을 유리로 장식하기도 했다. 현재 로버트 솔러를 뒤이은 미국의 목사기업가 중에는 유력 정치인을 능가할 만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많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릭 워렌(캘리포니아 주 새들백교회)과 조엘 오스틴(텍사스 주레이크우드교회)이다. 릭 워렌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15인, 미국 최고 지도자 25인, 포린폴리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 1위에 올랐고, 저서인 〈목적이 이끄는 삶〉은 종교서적임에도 미국 내에서만 약 2천만 부 이상 팔려 성경 외에 미국 역사상 단시일 내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매케인 후보를 자신의 교회로 불러 후보 검증모임을 가질 정도로 위세를 자랑하기도 했다. 릭 워렌은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들과는 달리 오래된 트럭을 몰고 다니고 청바지에 하얀 남방을 즐겨 입는 등 겸손한 모습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영리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엘 오스틴 역시 한국에서도 수십만 권이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 〈긍정의 힘〉의 저자로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부흥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4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 〈담대한 희망〉에도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가 개척했던 레이크우드 교회를 매주 3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의 설교방송은 미국 내 케이블방송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0개국에 송출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며 일반인들도 현실에 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최고로 만들어준다는 논리가 중산층 신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릭 워렌과 조엘 오스틴은 현재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추종하는 인물들로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은 새로운 성지로 각광받고 있고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워렌을 따라 하기 위해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형 메가 처치를 가장 잘 응용하는 교회들은 이른바 서울의 강남형 대형교회들이다. 강남형 교회들은 곧잘 강북형 대형교회들과 비교가 된다. 강북형 교회들은 60~70년대 호남·충청권 이농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서울의 구로·관악·중랑·성북·금천·광진·성동·서대문·은평·영등포 등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부흥사형 목회자들에 의해 성장한 교회들을 말한다. 이들 교회들은 박정희 정권시절의 개발독재형식을 답습해 신자들의 헌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거대한 성전을 짓고, 목회자들은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다. 강북형 교회들의 대표는 순복음교회·금란교회·은혜와진리교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기복신앙에 근거해 현세적 축복과 신유·은사·방언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강남형 교회들은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이태원·목동·경기 분당구·산본·평촌·일산 등 신도시를 배경으로 경제호황기인 8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들을 말한다.

강남형 교회들은 미국의 메가 처치들을 모방해 중산층의 욕망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교회들은 가난 극복이 우선이었던 강북형 교회의 기복신앙과는 다른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다. 즉 더 큰 아파트와 더 많은 자동차, 더 강력한 정치·사회적 권력, 더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자녀들의 아이비리그 진학 등에 대한 기도를 통해 신의 힘을 빌어 계급의 재생산, 또 다른 지배-피지배의 구조, 즉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면서 한국 교회의 파워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중소도시·농촌교회 신자들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에 반해 강남형 교회들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소비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강남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여성신자와 스캔들이나 재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강북의 줄부형 목회자들과 다르게 릭 위렌 같은 목회자들을 모방해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목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운영도 제왕적 리더십 대신에 팀 사역을 통한 나눔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강북형처럼 동원형이 아니라 신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전스쿨,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스쿨,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아버지학교, 각종 리더십스쿨, 영어 예배와 성경공부 등이 그런 프로그램이다. 복음전도보다 사회 선교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들 교회를 통해 릭 위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의 <다니엘 학습법> 등 기독교 계통의 자기개발 서적이 널리 읽히고 있다. 교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경우에도 이른바 살아 있는 예배를 강조하며 형식을 강조하는 강북형의 틀을 깨고 예배 전과 후에 밴드와 트럼펫이 팝 가스펠을 연주하고 찬양팀 역시 평상복 차림으로 성가를 부르는 등 ‘포스트모던’적 문화코드를 동원하기도 한다.

메가 처치 모델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이태원의 온누리교회는 일찌감치 기업의 마케팅기법을 도입해 교회를 성장시켰다. 이른바 기업 내부와 외부의 환경과 역량을 감안한 ‘SWOT’(강점·약점·기회·요인) 분석을 도입한다. 세대별, 직업별 맞춤형전도는 오늘날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세부마케팅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홍보 역시 교회 내의 광고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세밀하게 분석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드는 등 마치 기업의 광고 제작 과정처럼 진행한다. 또한 교회 안에 백화점 문화센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교양 아카데미, 카페와 서점, 꽃집 등을 만들어 교회를 ‘거룩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평일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공간화’ 함으로써 교회 대중, 특히 교회와 거리를 두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성장 노하우인 예배구성, 교육체계, 조직관리, 전도기법 등은 90년대 이후 신중산층을 대상으로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⁴³⁾

현재 온누리교회 모델은 수도권의 대형교회는 물론 중소형교회까지 가스펠 밴드를 운영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모델이 한국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43) 황일도, ‘황일도 기자가 지켜본 온누리교회의 겉과속’, 신동아 2007년 10월호.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강남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은, 명품회사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통해 계급 간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특화된 설교와 예배,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다른 교회신자들과 구별되는 우월감을 누리고 있다.⁴⁴⁾ 이러한 강남형 교회 출석자들이 불교가 강한 영남에 연고가 있음에도 기독교신자가 된 것은 미국 유학경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미국 유학을 통해 파워엘리트에 진입하고자 했던 이들은 유학기간 동안 미국의 문화와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를 불교에 비해 우월한 종교로 인식했으며 한편으로는 유학생생활 속에서 미국 동포의 절대다수가 속해있는 교회공동체에 출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⁴⁵⁾ 귀국 후 이들은 한국사회 신주류가 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강남권의 교회에 출석해 종교를 배경으로 한 이너서클을 형성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 중용된 고소영·강부자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형교회의 시장화된 교회운영은 미국의 메가 처치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온누리교회 역시 하용조 목사가 1996년 미국 시카고의 대표적 메가 처치인 월로우크릭 교회(담임목사 빌 하이벨스)를 방문한 후 월로우크릭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차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미국 교회를 모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기독교를 넘어 다른 종교에까지 미치게 될 경우 그것은 종교문화적 패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 강남권 유명사찰 중 일부도 유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판계도 붓다 또는 달라이라마의 이름을 내건 자기개발서는 물론,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 같은 경영서적까지 출판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대중의 일상적 삶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 전통이나 핵심 가치는 무시한 채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인스턴트식 내용으로 수직상승욕구로 팽배한 신자유주의적 종교시장주의를 부추기면서 기독교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타 종교와의 배타적 경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신도시가 들어선 경기도의 수원 영통, 동탄, 광주, 용인, 시화 지역은 기독교는 물론 불교·천주교 등 각 종교

44) 구미정, 강남형 대형교회 여신도들의 신앙양태에 대한 신학 윤리적 성찰',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93쪽, 2008년 4월.

45) 미국의 한인교회는 한국전쟁과 1960년대 김신조로 대표되는 북한의 대남위협이 강화되던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보다 보수적이면서 반공주의 경향이 강하다.

가 신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의 장이 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 지교회를 설립하려는 대형교회와 개척교회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대형교회진입 반대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종교를 영성보다는 문화적 소모품 내지 기호품으로 전락시키고 자기개발서 역시 미국식 성공지상주의를 무비판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미국식 성공주의에는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고 그 바탕에는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고, 구원의 확증은 세속에서의 성공이라는 칼뱅의 예정설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세술의 또 다른 변형으로 한때 출판계를 좌지우지했던 자기 개발서들이 극단적 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사회구조를 외면한 채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종교계의 자기개발서도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3. 불교 : 또 하나의 배타적 종교전선을 형성하나?

3-1.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불교

2008년 8월 27일은 현대 불교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날이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총결집해 정권에 맞서는 대규모 종교집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시청 앞에 모인 인원은 20여만 명으로 종교계가 주최한 시국행사로는 최대인파이었으며 이날 불교계는 정부에 대해 네 가지를 요구했다. △종교편향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입법 △시국 관련 국민대화합 조치 등이었다. 불교계의 대규모 봉기가 현실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9월 9일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10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두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어청수 청장 파면이나 시국 관련 대화합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불교계 주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1일 대구 불교도대회를 끝으로 투쟁의 깃발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한국불교는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의 피해자(?)이면서 몇 번의 대정부

구탄집회를 통해 기독교, 특히 보수기독교 세력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청와대조차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었다. 근대 이후 역대 권력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던 불교계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이명박 정권의 친기독교적 행보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불교계 역시 오랫동안 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기독교가 권력화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 될 수 있다.

실제 한국불교는 친일과 친독재로 얼룩졌고 권력과 공생해왔다. 2005년 2월 혜봉 스님이 발간한 <친일승려 108인-끝나지 않은 역사의 물음>에는 해방 후 불교계 핵심인사들의 친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친일 승려들은 비행기 등 군수품과 위문금 헌납운동, 징병제, 학도병 모집, 창씨개명에 적극 호응했으며, 친일 종단인 조선불교 조계종을 설립했다.

이들은 해방 후에 ‘친일승려’로 지목돼 승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반탁 세력과 연계해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왜곡하거나 은폐해 애국자로 둔갑했다. 조선불교 조계종을 만들고 스스로 총무원장이 된 이종욱을 비롯한 차상명·최범술·허영호 등은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고 서울 동작동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불교계의 친일과 친독재 유산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만해 한용운에 대한 불교계의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족시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는 일제에 투항을 거부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지만 해방 전에는 친일파 승려들에 의해, 해방 후에는 결혼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원시 당했다.

불교계는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이 승려생활을 시작하고 불교유신론(1910년)과 님의 침묵(1925년)을 지은 백담사에 과거 잘못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는 독재자 전두환 씨를 2년 이상 머물게 했다. 당시 불교 내부의 개혁세력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씨의 백담사행이 성사된 것은 노태우 정권과 불교계 상층 간의 결탁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일부 승려들이 전두환 씨를 종단 원로를 모시듯 면담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만해를 조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1994년 상무대 이전 사업 223억 원 유용 의혹과 동화사 80억 시주금 문제는 조계종의 권력예속화와 부패상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계종 전 국신도회장이던 청우건설 대표인 조기현 씨가 국방부 상무대 이전 공사비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80억 원을 대구 동화사 대불 공사비로 시주하고 당시 총무원장이던 서의현 씨가 그 돈을 1992년 민정당 대선후보 김영삼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단은 이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대 사회적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상무대 비리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3선을 시도하면서 경찰력을 지원받는 등 김영삼 정권의 비호를 받았으나 국민여론의 악화와 개혁세력의 완강한 저항으로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의 일도 불교계의 이중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3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주제로 열린 대법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지난 1년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직접 봉축 전화를 했고 청와대는 이대통령 명의로 전국 주요 사찰에 200여 개의 연등을 달면서 불심달래기에 나섰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와 불교계 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해 벌였던 불교계의 대정부투쟁은 결국 촛불정국에 편승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과거와 같이 권력과의 유착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의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시기 정권의 간섭이나 연계를, 결탁에 의해 종단권력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한국불교가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제정된 사찰령의 유산과 사소한 분쟁에도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하는 정치권력, 이에 줄을 대고 이권을 얻으려는 정치승려들이 온존하기 때문이다.

3-2.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불교

흔히 불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포용성과 다원주의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포교된 지역의 토착신앙을 수용했던 역사적 사실과, 동시에 그러한 다양한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신자들 역시 기독교인들의 불교 왜곡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는 설문조사도 있다.⁴⁶⁾ 이 조사

46) 이희재, ‘불교에서 바라보는 종교 다원주의’, 불교평론 10호, 2002년 봄호. 이 설문은 재

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해 왜 배타적이지 않은가를 묻는 설문에는 50%가 종교적 화합을 불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이고, 17%는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불교의 가르침이 배타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에 머물고 있으며, 74%인 대다수가 불교의 교리는 종교 간의 화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한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자비가 50%를 차지하였고 화쟁이 23%, 공사상이 11%, 불살생·비폭력이 10%를 차지하여 주로 자비의 정신이 종교다원주의를 긍정하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 대해 ‘기독교와의 대화’에 53%가 응답했고, ‘불교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적극적 포교’(33%)를 다음으로 들었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에 머물러 한국의 불자들이 종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제로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 스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기독교에 대해 거의 무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운동에 깊이 개입하면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모스님의 경우 필자에게 기독교는 불교의 깊이와 넓이를 따라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교는 팔만 대장경이 있는데 기독교는 기껏해야 신구약 두 권에 불과하고 붓다는 팔십세까지 살았고 예수는 서른 살까지 살아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스님이 농담처럼 말했다면 같이 웃을 수도 있었지만 매우 진지하게 얘기해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적이 있었다.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스님이 이런 정도라면 일반 스님들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그 스님이 신학자 폴 틸리히가 기독교는 불완전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후대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그만큼 더 완성시켜 갈 수 있었던 종교라고 한 말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강대 서명원 교수는 한국의 불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첫째는 한국 불교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하에서 계속 박해와 고통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불교를 부흥시키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기독교에

가불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불자들의 종교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경 쓸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근·현대에 들어 불교가 국내외에서 기독교로부터 너무 신랄하고 부당한 비판만을 받아 왔기 때문에, 서구로부터 한반도에 들어온 그 외국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에, 도저히 긍정적 관심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불교의 세계가 워낙 넓은데다가 어떤 면으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나 어려워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느라고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설사 기독교에 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접근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현실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기독교인들이 불자들에게 기독교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데에 실패해 온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다섯째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자기 종교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개종시켜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자들로 하여금 첫 순간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한국불교의 주요 가르침인 선종의 근본을 이루는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불급언전, 이심전심 등의 사상들 때문에 언어의 상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언어를 통한 종교 간 만남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불자들이 이웃 종교를 방편으로만 생각할 뿐, 그것의 궁극적인 가치까지는 인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신교 못지않게 불교적인 입장에서 종교적 배타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⁴⁷⁾

이런 예들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배타주의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고 또한 바쁜 현대생활에서 자기 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벅찬데 남의 종교까지 관심을 둘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불교에 대한 편견이나 몰이해만큼 일반 불자들이 아닌 스님들의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무늬만 종교다원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3. 자기 개혁에 소극적인 불교

한국불교가 대외적으로는 종교편향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체 모순을 해결하

47) 서명원, '종교 간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서', 불교평론 2008년 겨울호.

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권력화라는 것은 조직의 힘을 외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의 힘을 무기로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을 거부하는 것도 해당된다. 그동안 언론이나 불교단체가 제기한 불교계 각종 불법·비리 사건들은 각종 선거 과정의 금품살포, 불법토지매매, 사찰인수과정의 폭력, 말사 주지 임명과정에서의 금품수수, 국고보조금 횡령 및 배임사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 목회자들의 비리에 버금가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불교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치명적인 사례임에도 최고 행정기구인 조계종 총무원⁴⁸⁾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도 문중과 계파의 이해에 얽혀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판결로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이 어려운 것은 불교계 내부에 문중과 계파 간 이해가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고 몇몇 권력지향적인 스님들에 의해 결정이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4. 천주교 : 중앙집권적 구조와 조직적인 통제로 종교권력 유지

4-1. 8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으로 3대종교로 자리 잡아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신자는 500만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09년 7만 명, 1949년 15만 명, 1974년 100만 명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해 103명을 시성한 후인 198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1992년 300만 명을 돌파한 후 2000년 400만 명, 2008년 500만 명을 넘어섰다. 90년대 이후 8년마다 100만 명씩 늘어난 셈이다.⁴⁹⁾ 이 기간 동안 불교는 약 4~5퍼센트 증가했고 기독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천주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진행된 제사 등과 관련한 토착화 노력, 타종교와 대화하려는 노력으로 열린 종교로서 위상 확

48) 조계종을 예로 든 것은 한국불교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4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2009년 6월 8일 발표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8’을 참조했다.

보, 노동·빈민 등 다양한 사목활동, 김 추기경과 정의구현사제단 등을 통한 대사회적 발언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 추기경에 대한 추모 열기 역시 향후 천주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주교의 높은 성장은 천주교내부의 노력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실패에 따른 어부지리이기도 하다.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신자들의 경우 ▲세속화된 목회자 ▲헌금강요 교세 확장 등 외형에 치중 ▲장로 권사 집사 등 교인의 자리싸움 ▲헌금 정도에 따라 직분을 받는 모습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한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종교인 가운데 16.2%(4백20만)는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불교가 34.4%, 천주교가 14.9%인데 비해 개신교는 45.5%(1백90만)로 가장 많았고 또 비종교인 가운데 과거에 종교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42.8%(9백60만)인데, 이 가운데 불교는 26.2%, 천주교는 13.3%이지만 개신교는 58.6%(5백60만)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국 기독교를 믿다가 타종교로 옮겨가거나 종교를 포기한 숫자는 무려 750만 명이고 이 중 상당수가 기독교와 교리를 공유하고 있는 천주교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천주교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양질의 사제수급 능력과 순환보직, 효율적인 신자 관리는 종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는 향후 천주교 신자 수는 2010년 522만 명, 2015년 583만 명, 2020년 644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요미사 참여율이 낮아지는 등 냉담자가 늘어 비관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초파일, 백중, 천도재 등 중요 행사 외에 사찰출입이 많지 않은 불교신자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4-2) 수구보수화와 성장이데올로기에 빠지다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총보수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한 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와 대표인 전종훈 신부가 작년(2008년) 8월 서울대교구에서 징계

성 인사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로급인 함 신부는 그동안 근무해오던 제기동 성당에서 청구동 성당으로 발령이 났는데, 청구동 성당은 보좌신부도 담당수녀도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 신부는 통상 3~5년 근무하는 관례를 깨고 1년 반 만에 원하지도 않는 안식년 발령을 받아 사목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천주교 내에서는 함 신부와 전 신부에 대한 인사가 삼성비자금 폭로, 촛불 시국미사와 농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현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지도부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신부의 경우 정진석 추기경과 교구장에게 몇 차례 호출당해 상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⁰⁾ 천주교가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주교를 비롯한 지도부의 수구적 흐름도 있지만 신자들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천주교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하고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다.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천주교 인구가 전체 종교인구 중 10%대(광주제외)에 머물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25%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30%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기독교에 비해서는 낮지만 불교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 수도권의 과반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선택하고 특히 강남과 분당 일대에서 압도적 표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보수적 성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장관급 인사 중에 개신교 다음으로 많은 4명(한승수, 김경한, 유인촌, 전재희)이 천주교인이며 국회의원도 개신교 118명에 이어 78명으로 집계됐다(불교는 54명). 기업에서도 매출규모 1조원 이상 대기업 CEO 24%가 천주교인으로 기독교(22.9%) 및 불교(14.4%)에 비해 높았다.⁵¹⁾ 천주교 지도층과 신자들의 보수화는 천주교 전체의 대사회적 발언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때 시민사회나 노동·빈민단체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했던 명동성당은 건물보호와 신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내부 권력투쟁에서 보수파가 승리한 이후 주교 이상 고위사제들 역시 사회 문제에 대해 대부분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인권탄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사제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

50)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2008년 11월 24일자.

51) 이코노믹 리뷰, 제 288호, 2005년 11월 30일자.

은 용산철거민 참사 때도 한동안 이를 외면하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주교급인사 한 명이 인사치레 형식으로 현장을 찾기도 했다.

또한 올 3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이 1일 입원료가 400 만원을 웃도는 VIP전용 초호화 병실을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시에 자매기관인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작년 9월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주교의 보수화로 사제단의 활동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회 상층부의 압력은 물론 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제단 신부가 재직하는 성당의 일부 신자들은 사제단 신부들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미사 때 정부나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비판 강론을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때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하는 교회로, 민중들과 약자를 돌보아야 할 종교가 특권층의 종교로, 피안적·종말론적 교회가 치안적·세속적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⁵²⁾

사제단 외에 교회 내 진보적 단체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구대교구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미 청년학생운동의 싹이 잘렸고, 한때 학생운동의 메카 역할을 했던 명동성당청년학생연합회(명청)도 명맥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 기독교가 19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반체제반정부 가능성이 있는 이농인구와 도시빈민을 흡수해 탈역사화 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2000년대의 천주교는 중산층의 수구보수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방식을 모방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당 확장에 막대한 물량을 투입하는 등 종교시장의 선두에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물량적 성장과정에서 신부들이 미사 때마다 기독교 목사들처럼 ‘건축헌금’을 외치고 신자들 역시 과다한 건축헌금에 짓눌려 성당을 떠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 일부 신부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생긴 엄청난 채무 때문에 교구장을 찾아가 빚을 탕감해줄 것을 호소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천주교도 기독교의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선교를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4-3.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한 권력구조 공고화

5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수불자연합회 공저, 『현대사회에서 종교권력, 무엇이 문제인가?』, 65쪽. 도서출판 동연

천주교는 중앙집권화된 구조와 체계적인 언론 관리를 통해 내부 비리나 모순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기독교가 교단별로 분열해 약진하고 불교가 문중계파로 나누어져 문제해결이 쉽지 않는 데 반해 천주교는 중세봉건시대의 유산인 황제(교황)-왕제후(주교)-기사(신부)-평민(신도)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도를 이어받아 철저하게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천주교 역시 본당 신부의 공금유용 또는 횡령, 신부와 여신자간의 성추문⁵³⁾, 묘지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지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철저한 내부 통제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위계적 질서를 비판하거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폭로가 되었더라도 모든 정관계 언론 등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폭로당사자는 근무지를 해외로 발령해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정현문규현 신부 등 천주교의 진보적 인사들이 대사회적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교단문제에 소극적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교리나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천주교는 여성의 사제임명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도 없이 자동파문을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성모마리아와 예수의 신성문제 등에 대해 진보적 의견을 밝힌 몇몇 신부들은 교회당국의 제재로 학문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4-4. 나가는 말: 성직자 중심주의와 종교 시장주의를 극복해야

한국의 종교가 권력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자 중심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모두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천국에 가거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다. 대승불교가 유마경이나 승만경을 통해 재가자들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며 기독교 역시 종교개혁을 통해 만인

53) 지난 6월초 몇몇 언론들은 강원도의 한 천주교 신부가 수명의 여신도와 약 5년간에 걸쳐 강압적인 방법 등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했고 천주교 원주교구측은 해당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강원민방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비교적 자세하게 방송했으나 소식을 접한 중앙일간지들은 단신으로 취급했다. 강원민방측에 따르면 해당 신부의 성추문을 다른 사제들은 물론 교구측도 알고 있었으나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이나 목사들이 유사한 행동을 했으면 대서특필할 만한 내용이었다.

사제설을 인정하고 있다. 천주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있음에도 종교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직자 중심주의는 대외적으로 성직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를 표면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합치점을 눈감게 할 가능성이 높다. 각 종교의 주요 요직은 성직자 간의 인맥과 권력, 금력에 의해 좌우되고, 이기주의와 파벌, 배금주의로 인해 종교적 가치와 도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교는 승가의 전통을, 기독교와 천주교는 경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성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지 재가평신도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은 열외사항으로 하고 있다. 종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성직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적인 종단운영과 함께 재정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불교에 적용할 경우 중앙종회나 각 사찰의 주지 선거에 재가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찰운영과 재정 역시 전문성을 가진 재가자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도 각 종교가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종교 간의 배타적 경쟁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기독교의 아류에 불과한 한국 기독교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의 지위에서 물신 그 자체로 격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과 경쟁주의는 종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물론 불교와 천주교까지 내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지나치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벌써 그 징후는 종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2천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의 한국불교가 백년 안팎의 기독교와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기독교의 배타적이고 일탈적인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을 감안해 생명과 평화, 영성, 다원주의라는 21세기 메가트렌드에 맞는 포교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살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님들의 군 입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군승제도 역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승만 정권시절 먼저 도입된 군목제도를 종교차별 또는 편향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반생명제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불교정신에 맞으리라고 생각한다. 군 장병들에게 인스턴트식으로 베푸는 세례와

수계는 신자수를 기계적으로 늘이는 데에만 도움이 될 뿐 당사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종교의 힘은 청빈과 도덕성, 수행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폭력사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마다 불교계를 수렁에서 건져낸 것은 철저한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성철스님의 입적, 법정스님의 삶과 글, 도법수경 스님 같은 분들의 생명평화 순례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한국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현각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승려된 것도 송산 스님의 높은 법력에 감동해서였지 거대한 불당이나 불상 때문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조계종이 소속 승려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기 위한 법제화노력은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는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연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교는 기독교나 천주교에 비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60~70년대 사회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반면 불교는 80년대 민불련과 승가회가 태동하면서 참여했고 90년대 이후 승가회가 종단정치에 참여한 후에는 사회적 실천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역대 정권의 부당한 간섭 때문이라고고는 하지만 일부 승려들이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종단을 좌지우지한 것을 감안하면 불교내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종단을 압박하고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해서는 역량을 모아 싸워나갈 필요가 있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투쟁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역사적 진리이다. 한국 종교 중에 천주교가 그나마 국가권력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70~80년대 고 김수환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 사제단이 함께 투쟁한 결과였다. 죽음의 시대에 가장 대안적인 종교로 평가받는 불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의 길에 들어섰나?를 읽고

정범스님 · 조계조종양종회 의원

지난 10년간 종교NGO로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교단 내외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천 활동을 해 온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는 종교학자도 민중불교실천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창립 10주년 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발제자의 글에 대한 토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제자의 글은 제게 한국종교의 전체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속한 불교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가진 생각이 또 다른 불교의 권력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바람직한 불교의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 나는 승려로 불교

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자리는 저에겐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선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이란 제목을 대하면서 종교 권력이란 단어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종교의 권력화 문제는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종교권력의 시대를 논하는 것은 그만큼 종교의 권력화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그 이면에는 정교분리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상대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 본연의 자세, 영성이 중심이 되고, 약자를 돌보면서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일으키는 선봉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섹션의 주제 “다원주의 외투 벗은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과 갈등의 가능성”이란 제목 아래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의 길에 들어섰나?”란 제하의 발제자 글은, 결국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한국종교는 다원주의의 옷을 벗고, 서로 배타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주장하면서 상생해야 하는 종교들이 권력화된 모습을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실태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배타적으로 투쟁하고 갈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제자는 한국종교의 권력화에 반대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직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민주적인 종단운영과 재정투명성 확보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 대하여, 저는 두 가지 기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른 종교를 제외하고 불교에 대해 말씀하셨던 글에 대해 어설픈 논평 겸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한국사회의 종교편향에 대하여 불교인으로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것은 어쩌면 발제자나 다른 분들에겐 종교의 권력화에 불교가 동참하려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국가의 종교정책에 대한 편향성으로부터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걸 제 개인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권

력화에 끼여 들게 된 조짐은 종교편향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반사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에서, 중회의원으로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공인의 자격이기보다, 개인적 자격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발제자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불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발제자의 관점과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교가 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듯 한국불교는 조선왕조 5백년간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승유억불정책 속에서 온갖 부역과 조세를 감당했고, 승려는 도성출입금지까지 당했습니다. 1895년에서야 일본 불교의 도움으로 ‘도성출입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불교탄압의 상징적인 조치가 일본불교의 도움으로 해제되자, 당시 한국불교는 일본 불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불교가 1600여년을 이어 내려온 민족종교로서 자생적으로 뜻을 모아 체제를 정비하기도 전에, 사찰령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불교를 통제하였습니다. 사찰령은 사찰의 인사 및 재정권을 조선총독부가 가진다는 내용이며, 식민지 통치목적에 부응하도록 한국불교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결국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 관할의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찰령은 본·말사 관계를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주의로 개편함으로써 한국불교를 관료화시켰고, 사찰주지를 총독부에서 임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산중공의(山中公議: 사찰 대중들의 합의)에서 추대되는 관습을 뿌리째 뽑아버렸으며, 한국승려의 취처(娶妻: 처자식을 거느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불교를 결정적으로 왜곡하게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54년 사찰정화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승려 총수 6500여명 가운데 비구승은 4%에 불과한 260여명인데 비해 대처승은 96%인 6,240여명이었던 것을 보면 일제식민지시대 한국불교의 타락상과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찰령이 해방 후에는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둔갑하고, 오늘날에는 다시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불교를 국가가 통제하는 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원칙에 철저히 반하는 형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불교는 조선억불정책의 유산으로 사찰이 대개 산중에 있다 보니 ‘국립공원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 등 4-5개의 중첩된 법으로 묶여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불교는 국가의 통제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 한국불교가 일제식민잔재 청산과 민족상잔의 6.25를 통한 국난에 가람수호와 불교성보문화재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던 사이, 미군정을 통한 서양종교의 권력유착과 비호는 발제자께서 천주교의 예를 들어 발표하셨듯이 1909년 7만 명, 1949년 15만 명에서 50여년 사이에 2008년 기준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개신교의 예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원인에는 불교계의 권력 예측화와 내부 부정적 모습(폭력성이나 전근대적인 행정체계 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로대통령인 이승만정권’부터 국가 권력이 철저하게 서양종교 편향으로 관철되어 왔음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발제자께서는 불교의 장점 중 하나가 포용성과 다원주의인데, 오늘날 불교도들은 이웃종교에 무관심하고 몰이해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강대 서명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명원 교수의 분석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 1) 조선시대 이래 이승만정권 하의 박해 후 1960년대 이후 불교를 부흥시키느라 여력 부족
- 2) 서구종교인 기독교로부터 신랄하고 부당한 비판을 받아 외국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관심 부족

- 3)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는 것만도 벅차 기독교에 접근할 시간적 여유 부족
- 4) 기독교인들이 불자들에게 흥미롭게 기독교 설명하는 데 실패
- 5) 기독교인들의 강박적인 개종선교에 대한 거부감
- 6) 선종 중심의 한국불교의 특성으로 언어를 통한 종교간 만남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
- 7) 일부 불자들의 종교적 배타주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웃종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다른 종교의 전투적 선교 현장에 직면하거나 불교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만 다른 종교를 살피게 됩니다. 발제자께서는 포용성 많고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불교가 어째서 타종교(기독교)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포용성과 다원주의는 한국불교만의 장점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생명평화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성과 다원주의는 기본적인 특성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사회 특히 한국종교계의 ‘포용성’과 ‘다원주의’를 잃어버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가 기독교 등 타종교를 배우려 하지 않음은 다른 종교에도 해당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다원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타종교에 대한 이해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포용성’과 ‘다원주의’를 잃어버린 현상으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종교편향입니다. 이러한 종교편향은 비단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서양종교가 들어온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등장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종교편향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종교편향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고, 여기에 우리 불교계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불교계의 타종교를 이해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길희성 교수(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는 ‘예전에 ‘장로대통령’ 이승만정권 때에도 정권의 기독교 편향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판이하다

하나는 이승만정권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적 소수였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불교계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기독교는 이미 사회의 주류종교가 된 지 오래고, 실제로 불교나 가톨릭보다도 더 큰 사회적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불교계는 종교적 각성과 더불어 각종 개혁세력과 집단이 등장하면서 정치의식이나 사회참여 면에서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교계의 집단적 행보는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대립은 잠재적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참여 불교』, 2008.11, Vol 53)고 분석합니다.

불교계가 타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 알고자하는 노력만큼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대립과 갈등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평화롭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조직에서의 불평등한 정책을 뒤로 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이 좋게 이해하기를 불교계에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자기 개혁에 소극적인 불교를 언급하셨습니다.

발제자의 언급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불교계의 숙제입니다. 현대 전체 역사에서 바라보면 우리 불교는 자기 개혁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개혁의 의지가 발현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4년도 상무대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과정에서는 불교 개혁세력과 총무원 집행부 및 공권력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교계 내부에서 상무대비리사건을 단순한 서의현 총무원장의 개인비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종교권력이 부당하게 유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여 명의 승려가 온몸으로 항거했습니다. 불교계 내부에서 개혁정신의 발현과 자주성을 회복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발제자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늦게나마 시작된 94년 중단개혁은 그 후로 자정능력이 부족한 불교계의 많은 어려움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내부자정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말입니다.

4. 나가는 말을 통해서 발제자는 성직자 중심주의를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모두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천국에 가거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면서, 종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직자 중심주의는 성직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를 표면화시킬 뿐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비리를 눈감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경우 중앙종회나 각 사찰의 주지선거에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사찰운영과 재정 역시 전문성을 가진 재가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발제자는 ‘성직자’란 개념을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불교의 승려를 ‘성직자’로 표현하는 것에는 어감의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양종교의 성직에 대한 개념이 우리 불교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제자는 ‘대승불교가 유마경이나 승만경을 통해 재가자들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며 기독교 역시 종교개혁을 통해 만인사제설을 인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독신수행승(비구승)의 경우 이에 대응하여 결혼한 승려나 재가불자의 위상등이 정립된 경험이 적고 불교 내부의 사찰운영과 조직체계를 기독교 등 서양종교를 모델로 불교가 변화되어야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천주교의 신부제도와 독신승(비구승)의 개념이 비슷하니까 천주교처럼 좀더 세련된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겠습니다. 일

본식민지배의 영향인 왜곡된 대처승 제도로 인해 최근에는 간신히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불교(조계종)의 경우 성직자(독신비구승)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한 종단이 성직자 중심주의에 비판의 대상이 됨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종단 선거나 사찰운영에 있어 재가자의 참여문제는 아직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불교도 성직자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찰재정을 공개하거나 투명한 사찰재정을 위해 재가자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단법으로도 명문화하였으며 점점 사찰이 성직자와 재가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란 의식이 성장한 결과일 것입니다.

5. 또한 발제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도 종교의 책임으로 각 종교가 청산해야 할 과제인데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물론 불교와 천주교까지 신자유주의적 가치관과 경쟁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가 기독교와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과 평화, 영성, 다원주의라는 시대적 사조에 맞는 포교활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제안,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경쟁주의가 청산해야 할 과제라는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불교적 입장에서 생각해왔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군 군정 당시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을 합한 기독교인이 인구의 2~3%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기독교의 군목제도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따로 군종장교를 파견하여(개신교 천주교 공히 12월 25일 성탄절 하루를 쉽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군신부는 86명에 성당 280여개, 군목사 262명에 교회 98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경우 1968년도에 처음으로 5명이 군승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1994년 교회 장로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지시하여 360여명의 목사를 반으로 줄이고 불교 군승 90여명을 180여명까지 늘리도록 형평성을 맞추라는 승인이 있기까지 종교편향의 역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 현재도 불교는 군승이 13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포함) 성직자 350여명이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1360여곳의 성전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구통계에서 일반 신자 수 1천 만 명을 상회하는 불교가 이정도인데 다른 민족종교를 비롯한 소수종교의 상황은 설명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1949년 크리스마스 공휴일 제정, 1954년 기독교 방송 개국 등 서양종교 편향의 상징적인 조치 외에도 국가는 거의 모든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특혜와 비호로 관철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 불교는 기독교보다 26년 후인 1975년에서야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받고(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여 인정받은 것임), 또한 36년 후인 1990년이 되어서야 불교방송을 허가받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종교편향적인 정책을 지적하고 균등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는 몸짓을 어찌 시장주의나 경쟁주의로 폄하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 이 세미나가 불교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발제자는 국방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언급은 접어두고 불교계에서 근본적으로 군승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제언합니다. 군승출신의 토론자인 저는 군종장교제도 전체가 아닌 불교만이라도 군승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노무현정부에 이재정 성공회 신부가 통일부장관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부길 목사가 청와대비서관을 지냈다 해서, 불교도 형평성에 맞추어 승려를 불자장관과 비서관에 임명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때는 종교 간의 형평성 보다는 무참히 파괴되는 정교분리의 헌법적 기준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신교가 정당을 만들면 불교도 정당을 만들어야하지 않는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회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 불교에게 참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종교인구 통계조사 철폐운동'까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종교인구 통계조사를 당연시하는 종교관의 저변에는 종교와 종교 사이에는 선을 긋는 잘못된 종교관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내 종교와 남의 종교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동아시아의 종교, 인도의 종교가 그랬듯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성', 예

수가 얘기한 '신성(마음 속 하나님[개신교], 또는 하느님[카톨릭]),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이나 '자성'이 원래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종교인지를 구별하는 건 의미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성철 교수의 지적 역시 옳습니다. 종교의 기본 속성은 동일합니다. 불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타종교에 폭넓은 이해로 포용성과 다원주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자기 내부 개혁의 자정노력도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종교 간의 무한 경쟁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편승하여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할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에 있어 종교 인구를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면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간의 형평성만이라도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국가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종교자체의 본성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균등제도를 먼저 폐지할 수 있을 것이며 무한경쟁과 시장주의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불교도들의 종교편향에 대응하는 행동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기독교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인다는 시각 이전에 말입니다. 불교는 기독교와 경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종교편향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후 기

짧지 않은 토론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토론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는데, 계획서를 받고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백찬홍 선생님의 발제문을 받고서 더욱 난감했습니다. 저는 종교공동체의 중심에서 활동가로 살아갈 뿐 종교를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이 다소 발제자의 내용과 포인트가 다른 쪽으로 언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토론문에서, 한국의 3대종교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를 동일선상에서 동일

한 잣대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교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불교는 개신교나 천주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이 토론문에서 일부 밝히고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글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생각이 다른 분들과 교감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토론문에서 제대로 전달 안 되었다면, 토론장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흥미 있는 토론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 참고한 자료 〉

- 길희성, "다원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배타주의 : 한국 기독교의 배타성은 어디서 오나?", 『참여불교』, 참여불교재가연대, 2008.11, Vol 53
- 김성철, <http://www.kimsch.net/mettaframe.htm> 인터넷 자료
- 최병현, "일제불교의 침투와 식민지불교의 성격-정치권력과 불교교단의 관계", 『식민주의의 정치적 유산』,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3

• 3주제 •

**이 시대 불교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

이 시대의 불교 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

조은수 ·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여는 말

불교는 2,600 년전 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종교로서 나타났다. 무아설을 주장함으로써 본성론적 사고방식을 부정하였고 기성 사유 방식과 종교적 권위주의를 부정하면서 신성을 부정하였다. 이후 다른 양상도 역사적으로 나타났지만 불교는 신에 귀의하는 종교가 아닌 자력 종교로 출발하였으며, 중심에 대한 신앙과 복종의 종교라기보다는 자신과 세계의 존재 형태에 대해 의문하고 기존의 사유방식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가다듬어 갔다.

1,6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는 전통 사회에서, 사상적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굳건하고 유용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제공하면서 부

정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사유방식으로서 역할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오랜 역사는 전통일 뿐 그 유용성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권력과 경제의 논리가 하나의 당위로서 여겨지고 지배적 담론이 되어 버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해석과 가치관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아 보인다. 30년 전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느꼈던 그 자부심이나 불교의 사상과 논리에 대해 느꼈던 그 매력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이같이 사회적 공감대에서 떨어진 이때, 앞으로 불교는 어떤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현대의 네트워크의 세계에서 불교의 연기를 본다.

예경문에,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光明雲臺 周邊法界 供養十方無量佛法僧)

라는 구절이 있다.

광명의 구름의 누각이 법계에 두루하다는 것이다. "광명운대"는 빛으로 연결된 존재들의 실상을 비유하는 말이다. 부처님 백호로부터 나온 빛이 온 세계의 부처들로 이어지고 그 모든 부처들로부터 나온 빛이 서로 이어져 빛이 얹히고 섞이는 모양이 빛의 구름으로 형성된 장엄한 누각 같다고 한다. 광명운대의 이미지는 법성계에서 나오는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이라는 구절과도 상통한다. 개체와 전체 간의 상즉상입을 말한다. 봉건 시대에는 이것이 봉건적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었겠지만 현대에 와서 이것만큼 현재 사회를 잘 설명해주는 것도 없다.

중중무진의 인다라망의 그물코와 그물코와의 만남에 그 그물코 하나 하나에 영롱한 구슬이 걸려있고 그 구슬에 비추인 다른 구슬이 비추어 그 구슬 사이에 보이지 않

는 빛이 연결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또 서로에게 비추면서 끝없이 이어져 나가는 네트워크, 이러한 네트워크는 세상의 서로 얹히고 얹힌 존재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빛과 빛 사이의 무한히 중첩된 속에서 그 허공의 밝음 그 자체가 구슬같이 서로 얹히면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이다.

컴퓨터 앞에서 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나, 수많은 나와 남을 만난다. 백남준의 유명한 작품 "TV붓다" 속에서 불상은 TV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고 TV 스크린 뒤에는 불상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 그 스크린 속에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붓다가 방영되고 있다. 그 스크린 속의 붓다 속에는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붓다가 있고.... 이러한 중중무진의 붓다의 이미지 속에서 붓다는 스크린을 바라보는 동시에 스크린은 또 자기를 향해 있는 붓다를 보고 있다. 중중 무진의 붓다이다. 이 스크린 속에 비친 붓다와 스크린을 바라보는 붓다는 서로가 서로 속에 용융되어, 보는 자와 대상의 구분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을 또한 선(禪)에서는 나귀가 우물을 엿보는 것과 같고, 나아가 우물이 나귀를 엿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⁵⁴⁾

중중무진의 세계는 현대인들의 네트워크로서의 세계 속에서 그대로 체험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있다. 네트워크의 혁명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불교의 연기(緣起)의 가르침이 네트워크로서의 세계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둘러싸인 세계 속에서 24시간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따라서 [이 이치만 알 수 있다면 더욱 깨닫기 쉬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일과 삶의 다양성과 반중심적 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이 모두 각각의 중심이다. 각각이 독특한 개체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한번 빛이 지나가

54) 오윤희, 『메트릭스, 사이버스페이스 그리고 선』 (호미, 2003), pp. 46-55. 이 이외에도 네트워크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해석에서 많은 부분을 힘입었음을 밝힌다.

서 투과하는 순간 서로는 서로 속에 투영된다. 이러한 개체의 개별성, 반중심성, 그러나 콜렉티브한 개체의 움직임으로서의 이 사회에 대해 많은 현대의 문명 비평가들이 이미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의 개인의 존재를 '스마트 맵'이라고 했던가.⁵⁵⁾ 현대의 젊은이들은 영웅이 되고 중심이 되기보다는 전체 속에서 '맵'으로서 남고 싶어 한다. 그들은 서로 같음 속에서 다름을 본다. 이전 사회에는 영웅이 있고 히어로가 있었고 남과 다르고자 했지만 현대의 대중들은 다르다. 대중 또는 공중 속에서 우리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따로 또 같이 살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각각은 각각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대중들의 삶의 방식, 현대의 반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불교는 뛰어난 모델을 제공한다.

네트워크의 세계, 또는 네트워크로서의 세계 속에서는 대화의 방식도 달라진다. 채팅을 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터넷 세계에서의 대화란 서로 외글 외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독백이 이어져서 대화를 이룬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의 글밖에 담아내지 못하는 컴퓨터가 한계지운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대화 방식은 현대 사회의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공공의 담론의 정치학은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성립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사적인 공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개인의 의견의 형태로 집합적 공공의 의지로 표출되어 대중적 의견으로서 수렴된다. 요즘 한국의 정치 의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촛불 문화는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가 어떻게 집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현대의 일하는 스타일에도 영향이 닿아있다. 실리콘 밸리의 컴퓨터기그들은 불교적 문화 코드를 유행시킨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부디스트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스즈끼가 누구인지, 또는 텔레비전의 인기 만화 시리즈 심슨스에서 장난꾸러기 바트 심슨이 "one hand clapping을 들었는가" 하고 읊조리면 그것이 바로 일본 스님 하꾸인이 말한 척수(隻手) 공안(公安)인 줄 알아듣는 정도로 불교의 문화와 이념에 익숙하다. 만화속의 미국 꼬마는 선의 공안을 알

55) 하워드 라인골드가 『참여군중』이라는 저서에서 소개한 개념. "최첨단 기술 기기로 무장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영리한 군중'이라는 의미, 즉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아 보지만 동양의 전통 속에 산다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모른다. 실리콘 벨리의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같이 책상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일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짠 일정에 따라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과제와 목표를 놓고 씨름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과 아이디어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작업은 해쳐 모여의 과정을 통해 결국 전체에 유용하게 쓰인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개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삶의 방식은 불교의 승가 공동체에서도 이미 발견되는 바이다.

4. 동체대비의 윤리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동체대비는 잘 아는 이야기이다. 문수 사리가 유마힐에게 문병 와서 "이 병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습니까. 얼마나 오래 되었고 언제 낫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마힐이 "저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냐고 물으시면 보살의 병은 대비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한 바로 그 대비이다. 중생 모두에 대한 사랑이다.

불교의 윤리학은 이러한 관계의 존재양식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연기(緣起)가 우리의 존재론이라면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우리의 윤리이다. 동체대비는 나와 남이 한 몸임을 말한다. 연기를 깨달은 자 만이 동체대비를 느낄 수 있다. 네트워크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은 자라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아야 남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와 한 몸으로 느낄 수 있다. "광명운대"를 안다면 "공양시방무량불법승"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기를 통해 한 몸이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참여와 운동의 상상력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들과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존재의 처지가 되어 그들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5. 세계의 가상성과 공성에 대한 자각

이러한 동체대비는 공과 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 온다. 유마거사는 자신의 병이 어리석음과 애착으로부터 생겼다고 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애착이 또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이고 애착이다. 중생의 어리석음이 유마의 어리석음의 원인이고 유마의 어리석음은 중생의 어리석음의 원인이다. 떼어낼 수 없음을 자각했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런데 중생의 어리석음과 유마의 어리석음, 그리고 이 애착은 하나의 환화 조작이다. 현실은 조작된 환상의 세계이다.⁵⁶⁾ 나의 몸과 마음이 환화 조작임을 깨닫고 중생의 몸과 마음이 또한 환화 조작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 그 환화와 같은 세계에 사는 중생은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시각과 해법을 유마힐과 문수사리간의 다음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유마힐은 환상과 조작의 세계 안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수사리: 보살은 병이 난 보살을 어떻게 위문해야 합니까.

유마힐: 몸은 항상 변하는 것 무상(無常)이라고 말하지만 몸을 싫어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에 고통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열반을 좋아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에 자성이 없다고 [무아(無我)]는 말하지만 중생을 가르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몸이 공적하다고는 말하지만 마침내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를 참회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통해 남의 병을 가엾게 여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을 비추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복을 닦던 것을 기억해서 깨끗한 삶을 생각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진하며, 좋은 의사가 되어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살의 병을 위문하여 보살을 즐겁게 해 줍니다."⁵⁷⁾

56) 필자의 줄고, "종교적 신앙심과 미술적 영험: 『삼국유사』의 불교적 읽기" (『한국문화』 40, 2007)의 환화로서의 세계 참조.

즉 환화로서의 세계, 공으로서의 세계를 말하지만 이 세계를 버리지 않는다. 몸의 병 아픈 것을 위로하지만 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보고 배려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무상함을 망각하고 삶에 연연하거나 끄달리지는 않는다. 현재와 미래의 삶이 보다 낫기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소유하려 하거나 결과를 정복하려 않는다.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지만 일단 지나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 유마힐의 간단한 대화 속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불교가 제공하는 지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

6. 편력과 방향, 그리고 도전의 정신

붓다의 일대기와 당시의 수도승들의 삶의 방식 등에 관한 일본학자 사사키 시즈카 교수의 『출가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보면 붓다 당시의 그들의 편력과 방향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단순히 사업가 또는 인벤토가 아닌 이 시대의 문화 지형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그의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의 그 유명한 연설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방향이 그 이후의 확신의 길로 이끈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붓다 당시의 구도자, 즉 사문들은 기존의 사유방식과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적 자극과 고원한 이상을 찾아 집을 나와 진리를 추구하는 독특한 집단이었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구도자들의 유랑 생활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싯다르타의 삶에서 유랑과 방향이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방향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문화를 닦아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화 속에서는 이같이 방향은 장려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반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이 세워놓은 세속적 가치관에 갇혀 정신적 방향이 허락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고 회의하기 전 기성세대가 강요한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배우고 있다. 불교의 정신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57) 유마경 번역은 오윤희, 앞의 책, p. 224-225에 따랐다.

7. 불교가 가진 문화적 잠재력 - 생태, 환경, 양성 평등적 사고

서구 사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불교의 가르침 그 자체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 요소도 큰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일본에서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D. T. 스즈키는 선(禪)을 반이성주의의 상징으로서 소개하고 이것이 당시 기성 사유방식을 부정하고 체제에 반항하던 히피 세대들에 의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기성 제도권 종교 (organized religion)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1970년대에 들어 불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등장하였다. 또한 이런 외증에서 불교가 서구 사회에 쉽게 환영받은 배경에는 여성의 역할을 간과될 수 없다.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서구 종교의 신은 가부장적 남성적 신이며 이에 비해 불교는 여성 친화적이며 양성평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후 80년대에 이르러 서구사회에서 환경과 생태가 사회의 중요 관심이 됨에 따라 그들은 불교 속에서 생태와 환경에 대한 해석과 대답을 찾았다. 불교는 환경과 세계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교감과 일치를 강조하고, 인간과 세계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설득하는 종교로 이해되어 또 한번 새로운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한 비구니, 지울스님이 한국 대중들의 의식 속에 생태라는 화두를 심어주었다는 보도에 많은 서구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의 채식주의가 유행한 것도 불교가 서구 사회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었던 원인을 제공했다. 오히려 거꾸로 서구에서의 채식주의와 생태주의의 유행은 불교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다.

최근 미국 불교는 가족과 가정에 주목하고 있다. 60년대의 히피 제너레이션, 비트 컬처의 세대들은 지금 모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가진 세대가 되었다. 이들은 가족, 육아, 아이들의 교육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마음의 평화, 행복, 지구의 평화, 생태에 대한 관심 등에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 주말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명상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여름 캠프에 가족이 같이 참가해 서로 손을 잡고, "평화로운 개인이 평화로운 가족을 만들고 평화로운 사회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우주를 만들 수 있다"고 환호를 부르기도 한다.

불교는 당시 서구 사회에 수입될 때 그들의 사회와 문화의 제 현상에 대해 그 해법

을 제공할 수 있었다. 불교는 종교적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문화적 태도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용되었다. 소위 미국 불교, American Buddhism이라는 것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그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원래 있었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과정, 즉 becoming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불교가 인도 불교에서 시작해서 남방으로도 전파되고 북방으로도 전래되어 중국 불교, 한국 불교 그리고 일본 불교가 성립되어 온 것이니 우리가 바로 본산이고 종주국이지 그것을 지금 막 우리에게서 배우기 바쁜 미국사람들에게 무슨 미국 불교라는 정체성이 있겠나 하면서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 데 미국 불교가 무슨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시혜한다거나 다른 쪽이 우리 보다 열등하다는 가정 위에서는 진정한 배움과 나눔이 불가능하다.⁵⁸⁾ 그들은 현재 불교의 수행과 실천을 대안적 삶의 모델이나 가능성으로서 시험해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발전한 구미의 불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지난 삼십년간의 궤적을 본다면 불교를 수입하여 적응해 가는 그 과정은 불교에 대해 전통으로서 익숙해버린 우리에게 하나의 신선한 관점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종교차별의 문제를 살펴보자. 전 세계적으로 공생과 상호 존중의 이념이 한 사회의 지성의 척도로 여겨지고, 협력과 조화의 논리로 미래 세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백년 미국 역사를 통해 종교와 정치와의 분리의 원칙을 세워 그것을 지키기 위해

58) 본 발표자는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불교의 미국 포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 적이 있다. "제 생각은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나 중국불교와 더 나은가 못한가의 등수를 매겨서 우리가 잘 났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문화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으며, 그러한 다른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개성을 익힘으로써 한 개인의 문화적 그리고 지성적 지평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멋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한국대로 중국과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밖에 모르던 사람이 한국을 새로 알게 되면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호기심과 문화적 충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있어서 한국의 불교, 그 사상과 문화, 예술을 빼 놓고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없다는 데 그 요점이 있습니다. 즉 나와 남의 비교 우위를 위해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이 현대 사회의 문화적 지향성입니다. 그런 기대와 호기심에 부응하는 것이 나를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나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어 역지로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에 근거한 문화적 태도에서 상호 이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를 알리고 싶은 만큼 남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력한 그들의 자취가 새삼 돋보이는 때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미국을 여행하고 그 물건을 소비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국을 접하고 마치 자신의 나라처럼 익숙해 하지만, 미국 사회가 세워진 기본 원칙, 미국 헌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와의 분리를 헌법 속에 못 박고 있는 미국 건국의 이념에 대해 본인의 개인 경험을 들어 설명해보겠다. 2003년 봄 UCLA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석 후 시내관광의 일부로 하루는 LA 근교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겸 역사 자료 소장 도서관인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헌팅턴 라이브러리에서는 미국초기 역사와 건국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그때 한 전시실에서 본 그림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 18세기 말에 제작된 평범한 크기의 펜화로 중절모를 멋있게 쓴 신사 숙녀 관중들이 둘러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물이 고인 웅덩이에 다른 신사의 머리를 집어넣어 살해하는 광경이었다. 당시 18세기 말 미국 사회의 큰 문제였던 종교 갈등, 즉 아직 국교로 남아있던 영국 성공회와 여러 기독교 교파들 간의 갈등이 미국 건국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주가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하고 추가되는 와중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그림의 캡션에 따르면 당시 버지니아 주의 경우 침례교가 박해를 받아서 목사가 타 교파의 신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장면이라 하였다. 이러한 비인륜적인 사태까지 이르는 종교 간의 갈등을 목도하고 당시 정치지망생이자 변호사였던 제퍼슨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제퍼슨은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이라는 미국 헌정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종교·정치의 분리 법안을 입법화하였고 이것은 후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는 법으로 유명한 수정미국헌법 1조, 즉 First Amendment에 나오는 종교 자유에 관한 구절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부정한다고 비판받았을 때, 자신은 평생 한번도 빠짐없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이라고 의회에서 진술도 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교회의 세 블럭 앞에서 마차를 세우고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거기서 내려 걸어간다고 밝힌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전시되고 있었다. 제퍼슨이 기독교인으로 독실한 신앙인인 것은 물론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이며 그런 아픈 대가를 치르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종교의 자

유를 침범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세우는 나라에서 앞으로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종교·정치 분리이념을 건국이념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의 이러한 제안은 의회와 국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First Amendment는 200년 역사를 통해 준수되고 있다.

또한 제퍼슨은 학문과 종교를 분리시킬 것도 주장하였다. 8년 후 대통령직을 물러난 후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는데 버지니아 대학교는 종교적 학문을 배제하고 고등 학문을 가르친 미국 최초의 대학이되었다. 제퍼슨은 죽기 전 자신의 묘지명을 스스로 썼는데, "여기 이 자리에 미국독립선언문을 쓰고, 버지니아 주 종교자유법을 제정하고, 버지니아 대학을 만든 토마스 제퍼슨이 잠들다"라고 하여 이 세가지 일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했다. 자신이 대통령을 한 것은 이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일을 아니라고 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서는 기도나 다른 종교적 강독을 할 수 없고, 주립 학교에서는 신학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하바드 예일 등의 사립대학에는 신학 대학이 있다. 미국에는 각 주를 대표하는 주립 대학들이 있으며 본인은 미시간 주를 대표하는 Univ. of Michigan에 교수로 재직 한 적이 있는데 그 규모 등에 있어서 대표적인 주립 학교라 할 수 있다. 이들 주립 학교에는 신학을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Introduction to Buddhism등의 대형 교과목은 개설되어 수백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아시아언어문화학과 등을 통해 불교 관련 강의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개설된다. 미시간과 버클리 등에는 불교학 박사과정도 있다. 불교는 아시아의 대표적 문화와 문명이며 이를 통해 동양의 사상, 문화, 역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미국 역사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요하는 각종 소송과 새로운 조례 제정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제기한 학교 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소송에서 성경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분석은 합법이나 거기에 기반한 종교적 신념을 진리라고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미국 남동부의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창조론을 과학시간에 가르치지 못하다가 최근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만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판결되었고, 그외 학내 기도 허용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는 학교들이 있다. 켄터키 법원 밖에 있는 표지석에 새겨진 10계명을 제거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이라는 근거에서 그대로 두도록 소송 판결이 났다. 캘리포니아 주 라홀라 시의 Soledad 산에 1913년부터 있던 십자가에 대해, 공공의 대지에서 종교의 상징물, 즉 십자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을 드러내며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법이므로 그것을 제거하거나 팔 것을 명령하였으나 오랜 소송 끝에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은 기본 원칙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종교 차별 현상과 종교의 권력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복적 배타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세계관의 소산이다. 반면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업의 소산이며 나와 남이 같이 만들어 가는 인연소생으로 본다. 문제는 타종교에 대한 압박과 차별은 단지 피차별 대상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종교 문화의 기초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종교와 이념의 다양성과 평등성에 대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손상시킨다. 종교뿐 아니라 평화적 공존공영의 이념에 기반하여 세워진 이 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와 역사와 자유의 원칙과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8. 닫는 말

이 시대에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불교 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몇 가지 앞에서 열거해 보았다.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 적 속성에 비추어 연기를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연기와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동체대비의 자비 정신은 그 윤리적 당위가 된다. 연기는 현대의 문화 현상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좋은 틀이 될 뿐 아니라 미래의 실천적 모델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유용한 세계관도 제공한다. 불교의 연기적 사고방식은 세계와 타자를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지배하려던 서구의 이원론적 사

고방식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기의 세계관에서 평화와 공생의 윤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다른 생명 개체들과 환경에 대해 자비를 실천하는 동체대비의 세계관은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 즉 안심(安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가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념을 불교가 제공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한국 불교는 1,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불교적 상상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의 불교는 선, 화엄, 정토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풍부한 정신적 자원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교 연구는 내부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생각의 틀로써 불교를 해석하는, 즉 불교로써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순환적 체계 속에 갇혀 있다. 하지만 자기 순환적인 해석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불교의 보편적 이념의 가치가 이 현대 사회에 지니는 포텐셜이 너무 크다. 불교의 오래된 지혜를 다시 살리는 상상의 나라가 더욱 더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 시대의 불교 운동을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읽고

최준식 · 이화여대 교수

조은수 교수님의 위의 글은 불교와 현대의 현상을 잘 대비해서 썼다고 생각한다. 그 논지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이라 이견을 말할 것은 없고 다만 부연하는 정도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릴까 한다.

1.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불교적인 상황에 대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30년 전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매력에 요즘 젊은이들은 그리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만화 속의 미국 꼬마는 ‘한 손 바닥이 내는 소리(one hand clapping)’라는 공안을 알아보지만 동양의 전통에 산다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지적도 가슴에 와 닿은 묘사였다. 이 점은 평자가 직접 체험한 것과 일치한다. 몇 년 전 여름 학기에 영어로 한국 종교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학생이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미국 교포학생들이었다. 그들에게 불교의 삼보(three treasures)에 대해 물으니 미국 중부의 작은 학교에서 온 미국 여학생만 정확하게 ‘Buddha, Dharma, and Sangha’

라고 대답하고 다른 한국 학생들은 단연 모르쇠였다. 이것은 한국 토종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도 종교를 가르치는 시간에 불교의 '삼장(三藏)'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답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게 한국의 불교가 처한 현실이 아닐까? 이게 바로 불교 역사 1600여 년을 자랑하는 한국의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평자가 있는 학교에서 불교 신자를 만나기란 매우 어렵다. 어쩌다 그런 학생을 만나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왜 교회 안 가고 어린 학생이 절에 가느냐고 물을 판이다. 이렇듯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전혀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저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는 수준이다.

한국 불교는 신자의 숫자면 에서도 이미 기독교에 뒤쳐졌다. 불교신도는 숫자면에서만 기독교에 뒤지는 게 아니라 그 교육정도나 사회의 권력 지분의 분배 면에서도 그리스도교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전통종교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거의 준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회의 요직에는 기독교도들이 포진해 있어 기독교도가 안 되면 출세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필리핀을 제외하고--초대 대통령부터 현재의 대통령까지 포함해 기독교 신자 다수가 대통령이 된 유일한 나라이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 신자의 교육 정도가 다른 종교신자들을 능가한다거나 사회의 실세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

이에 대해 한국 불교는 과연 어떤 대응책으로 응하고 있는가? 물론 전보다는 나아진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아쉬운 마음은 떨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실세가 기독교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불교인들은 기독교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평자가 아는 한 불교 종단이나 학계에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상대방을 몰라서야 기독교의 엄청난 파상공세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독교 학계에는 불교나 동양 종교에 해박한 학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굳이 손자의 이야기를 들추지 않아도 게임은 끝난 것 아닌가? 저쪽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저쪽을 모르니 말이다. 불교 안에서도 신자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데--승려들에 대한 교육도 그리 다를 것은 없다--다른 종교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을 게다.

2. 논자는 미국의 종교와 국가의 분리 정책을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 간접적으로 안타까운 감정으로 토로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위험 수위 수준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 점에 가장 문제 되는 교단은 물론 개신교이다. 종

교와 세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교단이 개신교단이라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불교는 이 사태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에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하고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사람의 인간됨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런 데에 대한 불교를 비롯한 전통종교인들의 대응이다. 만일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그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것도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 불교도가 약 1000만이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다른 전통종교인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된다--이 표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한국은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볼 때 무법지대이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대면 다 통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종교박해가 된다. 이 점에서도 개신교가 단연 앞장서고 있다. 평자가 근무하는 이화여대의 예를 들어보자. 이대 같은 개신교단 설립의 대학에서 가장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채플이다.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씩 대학교회에 가서 약 30분 정도 예배 보는 게 그것이다. 이게 어디 18-19세기 미국 시골 이야기인가? 21세기 대명 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대는 기독교의 이념으로 설립한 학교이지 신학교가 아니다. 공적인 일반사립대학이란 말이다. 그러면 만일 대학 당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재정자립을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대학 중에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는 대학 없다. 만일 학교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면 사립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전체들의 공익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대에서는 교수회의나 큰 공적인 행사를 할 때 반드시 교목이 와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참석자 전원이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 나는 그런 자리에 거의 가지 않지만 세상에 이렇게 종교를 마음대로 강요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무친다. 한국 개신교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류국인 한국에서는 백주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더 들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데에 대한

불교를 비롯한 전통종교들의 대응이 아니겠는가?

‘남을 욕하면서 닳는다’고, 한국 전통 종교도들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신교의 행태를 모방해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것은 같이 공멸하는 길 아닐까? 그보다는 불교가 원래 갖고 있는, 종교자유를 존중하는 정신을 발휘해 개신교계가 학교에서 벌이고 있는 일을 금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끝까지 요구해 시정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불교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는 대강 지나가고, 스스로는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임들이 생겨나서 한결 마음은 놓이지만 이런 게 다 고쳐지려면 언제가 될지 막막하다.

3. 논자는 구미의 불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새롭게 생긴 구미의 불교가 한국 불교도에게 신선한 관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구미의 불교는 대승, 소승(상좌), 금강승에 이어 제4승의 불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새롭게 태어난 구미의 불교를 긍정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이 불교 공동체는 사부대중으로 만들어진 초기의 승가 공동체에 가장 근접한 불교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판정이 나오고 있다.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승가 공동체는 원래 승려와 신도들 간에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지나치게 승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승려들이 신도들부터 들림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에서 구미 불교도들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익히 있어 왔다. 이외에도 구미불교도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조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4. 마지막으로 불교가 지니고 있는 연기적 사고 같은 교리들이 서양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탁견을 듣고 싶다. 동양의 사상이 서구의 사상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 불교도들의 교육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하고 승려들 또한 다른 나라의 승려들과 비교해 볼 때 교학이나 수행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양의 사상을 대체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일은 한국 불교가 교학과 수행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었을 때에나 가능한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들은 내 철학보다는 불교나 유교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을 남긴 하버마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전통에 대해 여전히 무심하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 세계에 새로운 빛을 선사할 수 있는 사상이 나올 수 있을지 여간 의심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새로운 사상이 나온다면 차라리 동양의 사상을 모두 배워간 서양에서가 아닐까? 난숙한 서양 사상과 불교를 위시한 동양의 높은 사상이 융합될 수 있는 곳은 이 두 사상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서양이지 우리나라처럼 사상적으로 병적으로 치우쳐 발전한 나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참 고 자 료

재가운동의 정체성을 찾아서 - 초기Parisa의 野性を 중심으로 -

김재영 · 법사/청보리회

재가운동의 불교사적 기원은 초기불교시대의 Parisa(Parisad) - 빠리사운동으로 소급된다. Parisa는 ‘대중’, ‘회중’, ‘중’, ‘운좌(輪座)’ 등으로 번역되는데, 고타마-붓다 당시 불교도공동체를 일컫는 용어로 널리 통용되었다. ‘4부대중’이라고 할 때, 일부에서는 이것을 ‘Sangha’ - ‘승가(僧伽)’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용법으로 보인다. Sangha는 곧 승단(僧團)으로서 출가 2부 - 비구·비구니로 구성되며 이 Sangha에는 재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규정으로서, 비구 Sangha·비구니 Sangha만 존재할 뿐, 우바새 Sangha·우바이 Sangha, 또는 보살 Sangh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이 불교도공동체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4부대중으로 구성되는 Sangha’, 또는 ‘Maha-Sangha’ 등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법을 일탈한 편의적 해석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도공동체’ ‘불자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Parisa’이다. ‘대중’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Parisa'이다. '4부대중'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Catasso - Parisa'로 일컬어진다. 붓다 당시에는 많은 종류의 독자적인 Parisa들이 구성되고 활동하고 있었다. 초기경전 도처에서 수많은 종류의 Parisa가 등장한다. Sangha라는 용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Parisa가 불교도공동체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광범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Digha-Nikaya의 'Mahaparinibbana-Sutta'에서는 이렇게 설해지고 있다.

'아난다야, 여덟 종류의 빠리사가 있다. 그들이 무엇인가? 곧 까띠야-빠리사 · 브라만-빠리사 · 가하빠띠-빠리사 · 사마나-빠리사 - 사천왕-빠리사 · 도리천-빠리사 · 악마-빠리사 · 범천-빠리사들이다.

아난다야, 나는 내가 참석했던 수백 개의 까띠야-빠리사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들과 앉기 전에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의 외모나 언어가 어떤 것이든,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담마에 대해 설법함으로써 그들을 가르치고 고취시키고 분발시키고 기쁘게 하였다. ... '

수백 수천개의 Parisa들

까띠야-빠리사 ; 상류층 빠리사

브라만-빠리사 ; 지식인 빠리사

가하빠띠-빠리사 ; 상인 · 기업가 빠리사 등

초기불교시대 재가Parisa들의 역할은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이었다. 특히 Gahapati-Parisa, 곧 거사 Parisa들(혹은 장자Parisa들) - 상인 · 기업가 Parisa의 역할은 불교운동 전체를 견인하는 선구적 추진체가 되었다. 거사 Parisa들은 풍요한 물질 자원을 바탕으로 정사 · 승가람 등을 기증하여 Sangha를 외호하고 그들의 수행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상(隧商)을 조직하여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두 바퀴 수레를 몰아 거친 벌판과 사막을 달리며, 혹은 상선(商船)을 몰아 강과 바다의 풍랑을 헤치며 변방으로 변방으로 달려가 Dhamma를 전파하고 불교세계의 영역을 끝없이 개척해갔다. Buddhist India의 저자 Rhys Davids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농부들과 수공업자들 이외에 자기들의 상품을 배에 싣고 큰 강을 오르내리며,

또는 해안을 따라 수송하거나, 대상(隊商)을 조직하여 수레에 싣고 바로 다른 나라를 가로지르는 상인들이 있었다. 각기 두 마리 소가 끄는 두 바퀴의 작은 수레들의 긴 행렬을 이룬 대상이 그 당시의 분명한 모습이었다. 만들어지진 길도 없고, 교량도 없었다. 수레들은 숲을 통하여, 농부들에 의하여 열린 작은 길들을 따라서, 마을에서 마을로 고투(苦鬪)를 벌이며 나아갔다. 속도는 한 시간에 2마일을 넘지 못했다. 작은 내천은 여울 따라 좁은 곳으로 건넌고, 큰 강은 수레나룻배를 사용하여 건넜다.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세금과 시장세를 지불하였다. ...

Rajputana의 서쪽 사막을 통과할 때 대상들은 오로지 밤에만 여행하였고, 바다에서 별을 발견함으로써 바른 길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같은 선도사에 의하여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여로(旅路)에 관한 전체적인 서술은 너무도 정확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창작품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상인들에 의하여 황량한 사막과 험한 대하(大河)를 연결하는 교역루트가 동서남북으로 개척되고 이 교역루터를 따라서 Dhamma가 Ganga강 유역의 불교중국으로부터 변방(邊方, prantyan-tajanapada)으로 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교역루트, 곧 silk-road는 단순한 장사길이 아니라 동시에 상인전법사들에 의하여 열려간 Dhamma-road였던 것이다. Rhys Davids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불교 이전의 문헌에는 이런 루트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 가장 오래된 빠알리-니까야에서는, 우리는 유행하는 전법사들의 여로에 관하여, 그리고 특히 보다 긴 여로에 관하여 많은 설명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 전법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루트를 따랐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상인들에 의하여 이용된 것과 같은 증거이다. 후기에 와서, 우리는 상인들이 배나 소들이 이끄는 마차들을 실제로 이용한 루트에 관한 설명들을 갖고 있다.’

황량한 사막, 험준한 산악, 폭류, 폭염과 장마, 질병, 기근, 기갈, 맹수, 도적들, 국왕들의 횡포, 내부적 갈등과 이탈자, 시민들의 냉대와 방해, 음모와 박해, 모욕과 비방 -

개척의 여로에서 그들은 수많은 난관과 장애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회피하지 않고, 상인 특유의 모험정신과 도전의식으로 이 난관과 장애들을 대면하며 통찰

하고 극복해갔다.

재가연대가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초심을 상기하며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이념적 정체성(正體性) - Identity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고, 나는 초기 Parisa운동으로 돌아가는 것, Parisa의 야성적(野性的) 개척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출구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들 앞에는 거친 벌판과 험한 격류, 추위와 더위, 뱀들과 맹수들보다 더 무서운 시대적 과제들 - 상황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른다. 시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거친 야성적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끝) # (이 글은 지난 5월 30일 부산대에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주최한 발표회에서 발표했던 「재가 불교의 현황과 과제」 중 일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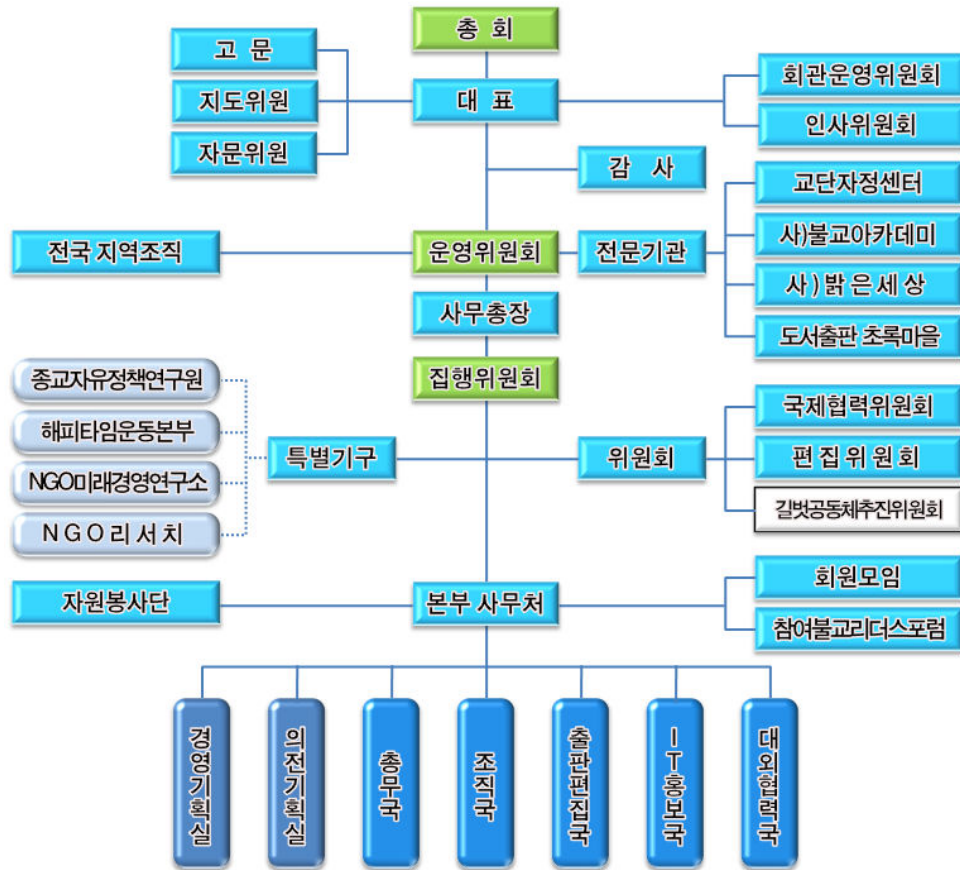
사명 MISSION

가 치	우리는 참다운 행복이 나와 가정, 일터와 교단, 여러 사회공동체의 고통과 희망을 자각하고 껴안는 데서 시작한다는 참여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목 적	심성의 개발, 청정한 교단, 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며
행 동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장을 제공한다.

비전 VISION

불 교 & 교 단	▶ 30개의 ON-OFF라인 국내외 커뮤니티 형성으로 - 3%이상을 회향하는 500의 리더 - 1%이상을 회향하는 1만의 가족공동체 - 1백의 해외 리더를 조직 ▶ 표준지표 도달하는 3백 사찰, 300 출가자 네트워크
시 민 사 회	▶ 성찰적 비전, 지속가능한 시민운동가의 삶을 지원 ▶ NGO를 위한 NGO 창설
세 계 종 교	▶ 종교내부의 자정, 사회참여의 지구적 실천 지향 ▶ 새로운 종교간 국제커뮤니티 구축

조 직 도



● 함께 하는 사람들 ●

● 참여불교재가연대(본부)

상임대표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공동대표
김학욱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성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박운식
대구신행단체협의회 명예회장
백경남 前 제3기 여성특별위원장
이민용 종교문화연구소 이사
이수덕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전우희 (사)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총회익장
박준영 前
한국방송영상제작진흥원 원장

상임고문
김종서
前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장
이 준 건국대 명예교수
정인익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조흥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고 문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두원 능인회 이사장
김순경 (주)새한팅스텐 회장
김재영 (사)우리는선우 지도법사
김홍근 前 불자법조인회 회장
민병천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춘기 前 부산대 교수
정해숙 前 전교조 위원장

상임지도위원
김인숙 前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배관성
(주)케레스타 쇼핑몰 대표이사

윤천수 감정평가사불자회 회장
윤청하 동국대 객원교수
임완숙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지도위원
김동률 KDI 교수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장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
리영자 前 동국대 교수
명호근 (주)성진지오택 회장
박용일 변호사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성태용 건국대 교수
신광식 前 방송진흥원 상임이사
안동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안홍부 공무원불자회 고문
이인자 前 경기대 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한국불교학회장)
정천구 영산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감 사
이만덕 변호사
임동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장

사무총장
이영철

국제협력위원장
성기서 서원대 교수

사무처
한기남 사무처장
이수연 총괄팀장
박상진 출판기획팀장
김미란 총무팀장

● 교단자정센터 ●

대 표
김학욱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자문위원

이 사
윤석표 변호사
김원보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원 장
최경춘

정책위원회
윤남진 정책위원장
한승희 정책위원

사무처
손상훈 정보관리국장

● (사)불교아카데미 ●

이사장
전우희
감정평가사불자회수석부회장

원장
박희택 위덕대 교수

명예이사장
윤천수 감정평가사불자회 회장

이사
김민희 울산불교교양대학 교문
김태제 아이네임즈 대표이사
권경환 (주)우리ETI 대표이사
노성식 삼주산업 대표
배관성 (주)케레스타 쇼핑몰 대표이사
성낙균 (주)성우건설 기술단 대표이사
성태용 건국대 교수
손영국 감정평가사
신성기 법무법인양지 대표변호사
이성상 서울레저타운 대표이사
이은태 광양백운제다원 대표
이정민 모다끄레아 대표
이혜숙 동국대불교대학원 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이태호 엠엑스시스템코리아 대표
조화제 금융결제원 전자금융연구소장
최진호 탑코리아 세무법인 대표

감 사
김태경 경인세무그룹대표세무사
임동주 한국학중앙연구원사무국장

불교인력개발본부
차차석
본부장/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찰경영연구소

법인사무처
한기남 사무처장/겸직
윤혜상 사무국장
박수영 회원사업팀장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대 표
박광서 서강대 교수

이 사
강병조 경북대병원 교수
김인택 (주)청원IND 대표
김 영 천태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박범수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제도개혁연구실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변호사
정윤선 연구위원

사무처
정웅기 사무처장
배병태 사무국장

● NGO미래경영연구소 ●
이영철 소장

● NGO리서치 ●
윤남진 소장

● 대구경북재가연대 ●

대 표
박운식 대구신행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사무국장
정선하